북한 교육권에 대한 합동 애드보커시 컨퍼런스

Joint Advocacy Conference on Education Rights in North Korea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대회의장) 11층

UNESCO HALL 11F, Myeongdong, Seoul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15:00 - 17:30

Thursday, November 30, 2023 15:00 - 17:30

DAILY NK NAUH 북한민주화네트워크 NKnet NDI 통일아카데미 Unification Academy

북한의 교육접근성에서 바라본 인권문제: 법과 현실의 괴리

A Human Rights Challenge in Access to Education in North Korea: Contradiction between Laws and Reality

공동 집필

데일리 엔케이 Daily NK

통일아카데미 Unification Academy

북한민주화네트워크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지원

국제민주연구소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2023년 11월 30일

November 30, 2023

목차

서론 2

워킹 그룹

북한 교육 접근권의 구조적 장벽 5

요약

서론

국제규약에 따른 교육권

북한의 교육 정책

북한 교육 접근권의 차별적 요소

- 지역에 따른 차별
- 성분 및 계층에 따른 차별
- 경제력에 따른 차별
- 여성에 대한 차별

북한 교육 접근권 실태 조사 32

요약

서론

부문별 실태 점검 결과

- 의무 교육 기간 확대 정책의 도입과 실태
- 학교 교육 내용 질과 보완 방안
- 무상 교육 실태
- 교육 접근권 보완 방식에 대한 질문
-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결론 및 제언 60

참조 문헌 64

표 및 그림 65

부록: 2023 북한주민 대상 설문조사지 154

서론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UDHR) 제 26조는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이 중요한 여러 명백한 이유들이 있지만, 특히 개인의 권리 보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데 있어 교육은 중요하다. 북한은 모든 북한 주민에게 평등한 교육접근이 주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 북한은 헌법상 전 주민 대상 12년 무상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1] 비준 국가이지만, 본 보고서는 구조적 장벽으로 인한 현 실태가 북한의 국내 및 국제법 의무와 상충됨을 보여주고 있다.

두 섹션으로 구성된 본 보고서는 통일아카데미와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데일리 엔케이의 연구·조사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접근을 제한하는 북한의 구조적 장벽과 현재의 차별적 실태를 보여준다. 특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교육권이 아동과 여성에 대한 차별, 강제노동, 성분 및 계층[2] 등 다른 인권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보고서는 북한의 불평등한 교육접근과 교육권 개선을 위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북한 당국을 향한 실질적인 제언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제안한다.

오랜 기간 북한사회를 연구해 온 통일아카데미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2017에서 2021년 사이 탈북한 탈북민과 북한의 교육 시스템·행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분석을 실시했고, 북한의 사회 구조에 대한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해 제언을 도출했다. 데일리 엔케이는 북한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코로나 시기 북한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는 통일아카데미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보고서는 국제민주연구소(NDI)가 지원하는 합동 애드보커시 활동의 일환으로 데일리 엔케이, 통일아카데미,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교육 실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북한주민을 위한 평등한 교육접근의 옹호 노력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

[1] 세계인권선언 26조는 또한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국제규약 제 13조는, “기회의 균등”이 교육서비스 제공의 이행 원칙이 되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북한은 당이 부여한 사회적 신분, 출신 성분, 정치적 성향 및 종교를 고려해 주민의 계급을 분류한다.
ICYMI: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DPRK: https://seoul.ohchr.org/en/node/547

워킹 그룹

NDI 지원하에, 5개의 북한인권단체가 모여 합동 애드보커시를 위한 워킹 그룹을 조성했다. 데일리엔케이(Daily NK), 나우(Now Action & Unity for Human Rights), SR 프로덕션(SR Production), 통일아카데미(Unification Academy), 북한민주화네트워크(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로 구성된 워킹 그룹은 북한의 교육 접근권을 합동 애드보커시의 주제로 정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콘텐츠 제작, 조사·연구, 캠페인을 통한 합동 애드보커시 활동을 해 왔다. 본 보고서의 도출 내용은 캠페인과 콘텐츠 제작을 포함해 다른 워킹 그룹 단체의 애드보커시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워킹 그룹 소속 단체의 간략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데일리 엔케이 Daily NK

데일리엔케이는 세계 최초의 북한전문 인터넷 신문으로 2004년 12월 창간 이후 북한 사회 내부 뉴스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왔다. 데일리엔케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편집 기조로 하며 한국 정부의 올바른 대북정책과 외교·안보환경 조성, 통일시대 준비에 기여하고 있다.

통일아카데미 Unification Academy (UA)

통일아카데미는 자유시장경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며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 교육 및 활동가 양성, 북한정보자유화를 위한 컨텐츠 개발 및 제작, 새로운 북한인권 아젠다, 통일 방안에 대한 담론을 발굴, 연구, 조사하고 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NKnet)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한국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주요 인물들이 창립한 단체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정책수립 및 애드보커시 활용을 목적으로, 고난의 행군 이후 현재 김정은 정권 까지 북한의 변화와 주민의 의식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나우 Now Action & Unity for Human Rights (NAUH)

2010년 설립된 나우(NAUH)는 남북한, 그리고 전세계 청년과 함께 북한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 나우(NAUH)는 '행동하는 목소리 voices in action'로서 보편적 인권과 세계 평화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 캠페인, 민주주의 교육, 탈북민 정착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SR 프로덕션 SR Production

SR 프로덕션은 시각 매체를 통해 북한의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다룬다. 탈북민이 결성한 SR 프로덕션은 구성원들의 북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내부 시각을 전달한다.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 단체의 의견이며,
국제민주연구소(NDI)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음을 밝힌다.

북한 교육 접근권의 구조적 장벽:

사회 구조적 차별로 발생하는 교육 접근성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통일아카데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공정한 교육기회 또는 교육 접근권을 저해하고 차별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조명했다.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1) 지역, (2) 성분과 토대 등 사회적 계층, (3) 학부모의 경제력, 마지막으로 (4) 성별로 세분화하고, 이러한 장애 요인이 학교 시스템 내외에서 발생시키는 문제점들을 짚어 보았다. 교육 영역에서 발견되는 이 네가지의 장애요인들은 북한 사회 전반에서 발견되는 차별 및 인권유린의 구조적 원인으로, 교육부문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아동 대상 인권유린 및 교육 기회 박탈의 결과를 낳았다.

정치적, 사회적 관행 및 가부장적 사고의 편향으로 인해 여성과 적대계급 출신의 개인이 정치 사회적 지도자급으로 승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유리 천장' 현상을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유리 장벽' 현상은 학부모의 직업 분류와 중학교 졸업생의 출신 지역에 따라 직업배치 지역이 제한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농촌지역 또는 지방의 중학교 졸업생들이 평양 등 대도시의 고등 교육 기회가 현저히 떨어지며 또한 도시 노동자로 직장배치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교사인건비와 학교 운영 관리 비용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교사의 생계를 학생들의 학부모가 책임지는 관행 그리고 학교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재정 및 물자지원도 학생들의 노동과 '사회적 과제'의 제출에 의지한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형편의 집안 자녀들은 학교생활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학우들과 교사의 질타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 같은 사회적 과제 제출 부담과 노력동원 요구로 인해 학교교육을 스스로 거부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5%에서 많게는 10-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계층별, 성별 차이로 인한 교육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즉, 북한 교육 부문의 다각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다루었다. 교육부문을 중요시하는 관행은 북한의 오랜 정치적 가치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김정은 정권은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교육발전'을 강조하며, '세계적 추세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교육부문의 역할이라며 교육부문의 발전을 당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세우고 있다. 이 같은 북한당국의 정책적 가치와는 별개로, 북한 사회에 오랫동안 고착된 가부장적이며 전근대적 관행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12년 무상 의무교육 서비스의 효과가 무색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능력있는 지방의 일반 중학교 학생들의 중앙대학 입학 기회를 늘리고, 대학교 졸업생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직장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학생 입학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교사의 월급 외의 기타 외부 수입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사 인건비의 인상안을 제안 했다. 지방 중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어와 과학교육 분야에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 원조를 통한 농업 기계화 프로젝트로 북한의 농업지원을 위한 중학생의 노동력 동원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여성에게 행정 및 당적 지도자 역할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것 그리고 북한 사회 전반에서 여성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중학교부터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시작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서론

교육부문에 대한 북한당국의 지대한 관심은 북한의 주요 회의 내용과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북한의 문건과 보고서, 노동신문 등에 잘 나타난다. 2023년 6월 중 진행된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8차 전원회의는 북한의 교육사업 발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말 노동신문에 소개된 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기사는 “나라의 문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라는 김정은 총비서의 인용으로 시작했다.

교육학자들은 공교육이 ‘전근대적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험의 획득 혹은 배분에 있어서 차등주의적 장벽을 허무는데 중요한 역할[3]했다’고 인지한다. 즉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다[4].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당국이 최근 주력하는 교육부문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북한 공교육이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만큼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지 짚어볼 예정이다. 특히 북한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차별적 요소들이 교육 영역에서는 발현되지 않는지 점검하고, 공교육의 역할인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한 개선점들을 모색해 볼 계획이다.

북한은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도입을 결정하고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실행한다. 이후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교육발전’에 대한 북한당국의 강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대부분 인권 주제에 있어서 이중성을 띄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부문 또한 당국의 주장과 현실간의 상당한 괴리가 발견된다. 다시말해, 12년제 의무교육 기간의 교육 기회는 북한의 학령기 아동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원리이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특성, 오래된 사회적 관행이나 학생의 가정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 등에 따라서 교육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현상들이 만연하다. 이는 교육의 핵심적 가치이자 목적인 ‘기회의 사다리'로써 역할을 방해하고, 따라서 권력과 경제력에 있어서 계층화, 계급화가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그대로 대물림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 같은 관행은 세계인권선언 및 북한이 가입 비준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권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 등에 명시한 교육권, 교육의 보편적 권리 등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북한이 1990년에 가입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CRC)의 28조 1항 (c)는 모든 사람들이 역량에 기초해 고등 교육에 접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북한당국은 외면하고

[3] 공교육제도의 형성, (2019. 9. 4), 교육문화연구소, https://www.edulabkorea.com/reference/general.php?ptype=view&idx=810&page=1&code=general
[4] 공교육, (2023. 9. 18),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B5%EA%B5%90%EC%9C%A1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에서 교육접근 기회의 공정하고 균등한 적용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구상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28조에 명시한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교육 접근권'이라고 인지하고, 교육접근권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요인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 하부 요인을 세분화했다.

(1) 지역에 따른 차별: (a) 평양-지방, (b) 도시-농촌
(2) 성분 및 계층에 따른 차별
(3) 경제력에 따른 차별: (a) 사회적 과제와 노력동원, (b) 학교 운영 재원의 학생 부담, (c) 교사생계 책임, (d) 사교육 기회
(4) 성별에 따른 차별

본 연구를 위해 북한에서 고급중학교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탈북민 8명의 자문을 받았고, 인터뷰 대상자는 여성 3인, 남성 5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교사 출신자 2인과 학부모 4인의 자문을 통해 학교생활을 지원한 부모의 관점에서 본 주제를 조명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고급중학교 졸업시기는 2017년 졸업자 4명, 2018년 3명과 2013년과 2015년 각 1명이다. 김정일 시기에 졸업한 인터뷰 대상자도 2명이다.

- 인터뷰 대상자 분류

	증언자	탈북 연도	출신지역	학교	졸업연도	대학교	부모직업
1	M01	2018	양강도 보천군	고급중학교	2018	-	모: 어릴때 사망 부: 노동자
2	M02	2014	함경남도 신포	제1고급중학교[5]	2007	공업대학교	모: 강사 부: 노동자
3	F03	2019	양강도 대홍단군	고급중학교	2017	농업간부학교	모: 간호사/밀수 부: 농장원
4	F04	2019	양강도 혜산시	고급중학교	졸업하지 않음	-	모: 장사 부: 노동자
5	M05	2019	양강도 혜산시	고급중학교	2015	군복무	모: 석탄유통 부: 모름

[5] 김지수, "김정은 시대 북한 유·초·중등 교육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 29-30, "북한의 수재교육기관으로 1984년 평양에 제1고등중학교를 수재학교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1986년 이후 각 도 소재지에 12개의 제1고등중학교를 설립하여 수재교육을 실시했다."

6	M06	2018	함경북도 회령시	고급중학교	2018	-	모: 탈북 부: 농장원, 환전브로커
7	F07	2013	양강도 혜산시	고급중학교	2013	-	모: 밀수 부: 노동자
8	M08	2014	함경남도 함흥시	고급중학교	2009	공업대학교 재학 중 탈북	모: 장사 부: 의사
9	F09 -mother	2018	함경북도 연사군	아들-고급중학교 졸업 딸-고급중학교 입학	2017 2017	해당없음	모: 기업소 부기장 부: 해외 파견
10	F10 -mother	2018	함경북도 연사군	딸-고급중학교	2017	해당없음	모: 가정주부, 도매상, 약초장사 등 부: 노동자 - 장사, 무역
11	F12 -mother	2019	함경북도 회령시 외곽 농촌지역	딸 아들	2012 2018	해당없음	아내: 가내수공업 남편: 공장 노동자, 환전브로커
12	F14 -mother	2019	평안남도 순천시	중학교	2017	해당없음	
13	F11-teacher	2000	함경북도 온성군		1987-2002 교사 역임	해당없음	
14	F13 -teacher	2010	함경북도 청진시		2010까지 13년간 교사역임	해당없음	

- 인터뷰 대상자의 지역 및 고급중학교 졸업 연도

졸업 연도	수		출신지역	수
2007	1		양강도	5
2009	1		평안남도	1
2012	1		함경남도	2
2013	1		함경북도	6
2015	1			
2017	4			
2018	3			

졸업하지 않음	1		
계	13 (두 자녀 부모 1인 포함, 교사 출신자 2인 미포함)	계	14

총 14인의 탈북민 인터뷰 대상자 중, 양강도 출신자 5명이며 도청소재지인 혜산시 출신자가 3명, 함경남도 2명, 함경북도 출신자 6명 중 도청소재지인 청진시 출신자 1명, 그외 회령시 2명이며, 나머지 3명은 지역의 군 단위 출신자였다. 평양 출신자는 없었지만 북한 출신 북한학 박사 2인과 북한 내부소식통을 정보를 받고 활동하는 북한전문 기자 3인의 자문을 통해, 평양과 지방간 또는 도농간 교육 접근의 차이를 유발하는 근원적인 체제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반영했다.

본론

1. 국제규약에 따른 교육권

교육권은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 일반이 그렇듯 교육권은 그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천부적 권리이다. 모든 연령과 성별, 직업, 지역, 계층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부여되어야 할 권리이다. 교육권은 교육 받을 권리와 교육을 보장할 의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제적 기준이 요구하는 교육권은『세계인권선언』과『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사회권 규약),『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협약)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제26조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아동을 비롯해 성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당사국이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특히『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에는 모든 사람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며 초등 무상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의 평등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제26조 제2항에서는 교육의 목표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26조 3항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제13조도 모든 사람의 교육권 인정과 당사국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회권 규약 제13조 제1항은 교육권의 보편성과 교육의 목표에 대해 명시하고, 제13조 제2항에서는 △초등 무상의무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 △기초교육의 강화와 장학제도, △교원의 물질적 조건 보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3조 제2항
>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 한다.
>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 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 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 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당한 연구· 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또『아동권리 협약』제29조 제1항에서는 아동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인격, 재능 및 능력이 최대한의 계발되도록 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유엔 헌장에 규정된 원칙들에 대한 존중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8조 제1항에는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기회균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역시 초등교육이 의무적이며 무료로 제공되어야 함과 동시에, 중등교육의 발전 장려와 아동의 이용 및 접근권, 무료교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고등교육의 기회 개방, 출석률과 탈락률 제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아동의 권리 협약』제28조 제2항에서는 학교규율이 인간의 존엄성과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28조 3항에서는 교육 관련 사항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의 촉진과 장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도표1〉 국제적 기준이 요구하는 교육권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 모든 사람의 교육 받을 권리 명시 (제26조 제2항) 교육목표는 인격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 (제26조 제3항) 교육의 종류에 대한 부모 선택권	당사국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사회권 규약)	(제13조) 모든 사람의 교육권 인정과 이행의무 (제13조 제1항) 교육권의 보편성과 교육의 목표 규정 (제13조 제2항) 초등 무상의무교육과 기회균등	1981년 가입비준 당사국
아동의 권리 협약 (아동권협약)	(제28조 제1항) 고등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기회 개방 (제28조 제2항) 학교 규율에 의한 교육권 침해방지 (제28조 제3항) 교육에 대한 국제협력 촉진 및 장려 (제29조) 아동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명시	1990년 가입 비준 당사국

2. 북한의 교육 정책

북한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일체의 교육 과정을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김일성은 1945년 11월 3일 실시한 담화에서 '새 조선을 건설하려면 많은 민족간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절박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에도 북한은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지속해 왔다.

1977년 9월 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5기 14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발표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도 교육과 인재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며, "사회주의교육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혁명의 교대자들인 새세대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북한 사회주의교육의 기본과업이 사상개조에 있으며,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를 길러내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 제시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법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이야기 한다.

북한은 1948년 건국 후 50년이 지난 1999년에 『교육법』을 만들었다. 2012년 북한은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국가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의 목표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고 밝며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제2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보고서(2002. 4. 9)』에서 "선진적 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해 모든 공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완전하게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73조에서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헌법 제43조에서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 밝히고 있는 참다운 애국자와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은 다름 아닌,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사회주의적 인간 양성에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교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치사상교육이다.

북한의 『교육법』에도 교육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은 잘 드러난다. 1999년 제정된 『교육법』 제1조에는 사회주의교육의 발전을 위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 육성을 사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중등일반교육의 의무와 무료교육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제13조에는 12년 중등일반 의무교육 학제를, 제14조에는 학령 어린이의 취학의무가, 제16조에는 입학 및 수업 등에 대한 무료교육의 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교육법』에는 교육조건보장을 위해 제38조 교육부분의 재정예산, 제40조 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 제41조 교과서와 참고서 등의 생산보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랑해 왔다. 북한 헌법 제45조에는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의무교육제도는 1956년 8월 4년제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도입되어 총 11년 의무교육제도를 유지했다. 2012년 9월 25일 초등교육 기간 5년으로 늘리고, 중등교육을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했고 여기에 유치원 1년을 포함시켜 12년제 의무교육으로 변화해 왔다. 그리고 헌법 제47조에서는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도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에 "우리의 교육을 발전하는 세계적 추세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세워 높은 지적, 실천능력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는 것은 교육부문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당 및 정권기관 일군들이 온 사회에 교육을 중시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해나가며 교육사업을 다른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정책적 지도, 기술적 지도를 포함하여 교육혁명을 위한 지도와 방조를 강력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6]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교육사업에 대한 전당적·전인민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월간잡지 『오늘의 조선』에서 황해북도의 사례를 들어 도의 해당기관과 일꾼들이 교육사업에 필요한 실험실습 설비들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모범사례[7]를 소개했다. 도 내 여러 시, 군 단위의 기관 일꾼들은 "학교들에 대한 임무분담을 구체화하고, 교육기자재들과 설비들을 갖추어주었다"고 보도했다. 즉, 교육법 제 40조에서 정한 대로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이 '교육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계기를 해당 교육기관에 보내'주는 모습을 보도한 셈이다.

이러한 사례는 북한의 『시, 군발전법』 등을 통한 지방의 자체적 운영 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21년에 제정된 『시, 군발전법』에 의하면, 농촌과 지방의 교육기자재 생산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70조에서 '학교건설과 후원사업'에 대해 명시했다. 즉 지방의 행정기관인 '시, 군 인민위원회가 학교의 교육설비를 현대적으로 꾸려줘야 하며, 후원단체를 정해서 담당 학교의 물질과 기술적으로 후원하라고 정했다.

[6] 공로혁,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가 교육부문앞에 제시한 과업," *로동신문*, 2023년 6월 30일, http://www.rodong.rep.kp/ko/index.php?MTJAMjAyMy0wNi0zMC1OMDE4QDE1QDJAQDBAMTg==
[7] "황해북도에서 교육지원열의 고조," *오늘의 조선*, 2023년 4월 7일, https://dprktoday.com/news/64673

〈도표2〉 북한의 교육권 관련 법·제도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사회주의 헌법 (2019년 수정보충)	(제43조) 참다운 애국자,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육성 (제45조)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제47조) 모든 학생에 대한 무료교육 제공 (제73조) 공민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
교육법 (2015년 수정보충)	(제12조) 중등일반교육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 (제13조)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 12년 (제16조) 입학 및 수업 등 무료교육 규정 (제38조) 교육부문의 재정예산 (제40조) 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 (제41조) 교과서,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 록화물의 보장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1977년 발표)	○ 1977년 9월 주체사상을 구현한 교육강령으로 발표 ○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내용·방법·제도 등을 규정하고, 모든 인민을 '공산주의적 새인간형'으로 육성 ○ 공민의 교육권과 학교 의무교육을 명시
시, 군발전법 (2021년 채택)	(제70조) 학교건설과 후원사업 - 시, 군인민위원회가 지방자재 동원해 교육설비 현대화, 후원단체 정해 학교를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후원

3. 북한 교육 접근권의 차별 요인

학생들이 태생적으로 처한 여건과 무관하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학생의 역량과 재능에 따라 개인적 제약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교육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은 12년 무상의무교육제도 도입을 2012년에 결정하고 2014년부터 전국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또 교육법 (1999년 채택, 2015년 수정보충)의 제16조 '무료교육의 내용'은 "모든 교육은 무료이다"라고 하며, "교육기관은 학생 또는 그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료금을 받을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북한의 무료 의무교육 서비스가 사실상

'무료'라고 하기에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현금과 현물이 상당했으며 그로 인해 무상의무교육의 수혜자가 교육에 접근하는데도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김정은 시기에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탈북민들과 학부모, 교사, 북한 교육 부문의 전문가 등의 자문을 종합한 결과,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교육에 접근하게 만드는 일련의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교육의 핵심적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의 사다리'로써 북한 교육서비스가 기능하지 못하는 국가적 풍토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 교육의 사다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부모 세대의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례들을 더 많이 축적함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성장과 동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교육현실에는 '기회의 사다리'가 거의 존재하지 못하며 오히려 기회의 사다리가 역할 할 수 없도록 '유리천장'과 '유리장벽'이 곳곳에 놓여 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이 교육 접근권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형성된 사회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북한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받는 교육서비스의 차별적 적용 기준이자, 교육기회의 정당하고 균등한 적용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분류해 보았다. 즉 지역, 출신성분 및 사회적 계층, 집안의 경제력과 성별, 네 가지로 분류되는 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별을 살펴볼 예정이다.

어느 사회나 차별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건전하게 성장하는 사회라면 교육이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게 만드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 그렇지 않고 교육에 접근하는데 오히려 기존의 차별적 요소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차별의 악순환이 대를 잇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의 변화 발전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탈북민들과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북한 교육 접근권에서 차별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바로 북한 사회 전반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의 요건이란 점은, 그런 차원에서 북한사회의 특성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별의 대를 이은 악순환 서클을 돌고 있는 북한 운영 메커니즘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돌파구가 필요하다.

3.1 지역에 따른 차별

2019년 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위해 북한이 내놓은 국가보고서도 도시와 지방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당국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년 모든 시와 군 단위에서 한 두 개의

농촌학교의 교육환경과 조건을 현대화했다고 보고했다[8].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해 만난 2017-2019년 어간에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탈북민들의 증언에서는 UPR 국가보고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북한에서 교육기회에 접근하는데 지역별 차이가 중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현상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중앙에 비해 지방, 특히 농촌지역의 교육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이다. 둘째는 학교와 학생 거주의 지리적 위치가 졸업생들의 진로, 즉 사회 진출을 위한 줄세우기의 확고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현실이다.

이 같은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평양과 지방 사이의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는 북한당국도 최근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로 보인다. 3차 UPR의 국가보고서 내용과는 달리, 2021년 6월 북한이 UN SDGs 고위급 정치포럼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북한이 처한 어려운 문제로 도-농간 교육 격차를 꼽았다. '203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 실행에 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에서 SDG 4번 목표인 '통합적이고 평등한 질적인 교육을 이룰 목표' 실행에 대해, "교육 내용과 방법의 혁신 수준이 낮고, 교육적 요구에 따른 교육 환경 개선보다는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농촌과 도시 간 교육 격차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며 도전과제를 평가했다.

농촌지역의 발전과 지방 시, 군의 발전을 국가적 개혁과제로 삼고 있는 최근 북한당국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1.1 농촌과 지방의 교육 인프라의 부족

농촌과 지방의 인프라 부족 문제는 비단 교육분야뿐 아니라 북한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부문에서 나타나는 지방의 교육 인프라 부족의 피해는 당연히 농촌과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혜자들에게 극적으로 나타난다. 평양과 중앙을 중심으로 국가적 재원과 역량을 투자하는 정책으로 인해 수도의 교육 인프라에 국가 재정 투자가 집중된다. 반면, 지방 학교의 교육예산은 지방행정 단위가 책임진다.

[8]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A/HRC/WG.6/33/PRK/1, Para. 46, "In 2016 1~2 rural schools in each city and county were transformed into model schools with fine educational conditions and environment, and efforts are being made in accordance with an annual plan to generalize their examples to other rural schools." https://digitallibrary.un.org/nanna/record/3798135/files/A_HRC_WG-6_33_PRK_1-EN.pdf?withWatermark=0&withMetadata=0&version=1&registerDownload=1

2015년에 수정보충한 북한의 '교육법'은 제 40조와 41조에 교육기자재 및 교재 등의 생산공급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교육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실험설비 등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 군발전법 (2021년 제정)은 '학교건설과 후원사업'에 대한 제 70조[9]에서 지방의 인민위원회에 지방자재를 동원해 학교 교육설비를 갖출 책임을 부여했다.

하지만 시, 군, 구 단위의 행정 자립도가 심각하게 낮은 북한의 지방 행정이 교육예산을 학교에 배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 입장이다. 따라서 교육예산이 없는 학교 운영의 부담은 많은 부분 학부모들에게 떠넘겨지고, 북한의 실정상 이로 인한 지역간의 교육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 같은 현실은 탈북민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났다. 양강도 보천군의 리 단위의 고급중학교를 2018년에 졸업한 증언자 (M01)는 "졸업할 때까지 우리 학교에는 컴퓨터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 "2015년에 컴퓨터를 학교에 다 놓아라고 했는데, 교장이 학급 선생들에게 몇 대씩 내라고 배당을 시켜서 학부모들에게 받거나 선생님이 다른데서 돈을 벌어서 컴퓨터를 샀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학교는 너무 한심하다. 지역에 따라서 학교 시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 F12-mother, 2017년 순천 시내 고급중학교 졸업생의 모친

> "교복, 학용품 등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라는 지시는 평양부터 시작해서 실행하고, 그 다음은 도 소재지 등 큰 도시에서 실시하는데, 멀리 농촌과 시골까지 다 전면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직 어렵다고 본다." — F13-teacher, 2000년대 초반까지 교사였던 탈북민

지방 또는 농촌 학교에는 영어나 화학교사가 배정되지 못해 알파벳도 모르는 학생, 실험 한번 해보지 못한 학생들도 매우 흔할 정도라는 북한 교육 분야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다.

학부형 출신 인터뷰 대상자 (F12-mother, 2017년 졸업생 모친)는 학교 교육시설 수준에서 차이는 지역단위의 기관, 공장, 기업소가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에, 농촌 학교는 상태가 한심하다고 전했다. 농촌의 협동농장이 학교 기자재를 충당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지역간 격차는 결과적으로 대학교 입학이나 사회진출에 있어서 지역간 심각한 격차로 이어졌다.

[9] 시, 군발전법 (2021년 제정), 제70조 (학교건설과 후원사업) "시, 군인민위원회는 지방자재를 최대한 동원하여 학교와 학생소년회관을 비롯한 과외교양거 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려주고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고 학교를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도와 주도록 하며 후원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대책하여야 한다."

이런 환경은 심지어 사교육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다.

> "연사군에서는 사교육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고, 청진시에 사교육이 발달돼 있어서 간부 아이들은 청진시로 보내서 사교육을 받는다. 권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돈이 있어야 교육도 시킨다." — F09-mother, 2017년 고급중학교 졸업 후 군입대한 아들의 모친

3.1.2 졸업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지역에 따른 차별

거주 지역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은 자연스레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의 진로에도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 2012-2020년 사이의 노동신문과 교육관련 북한 발행문을 분석한 북한 대학교 현황에 대한 통일연구원의 연구 결과[10] 총 271개 대학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북한의 중앙대학[11] 총 37개 중 21개 즉 60%가 평양시 소재 대학이다. 또한 북한 내 종합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5개로 모두 평양에 존재한다.

〈도표3〉 지역별 대학 현황

지역	평양	평남	평북	황남	황북	함남	함북	강원	자강	양강	남포	개성	나선	합계
대학수	52	38	26	18	17	38	26	16	11	8	13	5	3	271

〈도표4〉 유형별 대학 현황

	종합대학	부문별 대학	직업기술대학	공장/농장/어장대학	합계
대학 수	5	125	48	93	271

이러한 주요 대학의 평양 집중은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의 지역에 따른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중앙대학을 졸업해야 사회 진출 이후 승급이 빠르기 때문에 고급중학교의 성적 상위권 졸업생

[10] 조정아 외,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통일연구원, 2020,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dbf1e78b-cb84-449a-84df-350acbcfc045

[11] 중앙대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학들 중 내각 교육성이 직할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중앙급 대학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중앙대학_(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학생들은 당연히 중앙대학을 선호한다. 하지만 제1중학교 졸업생들이 주로 중앙대학에 들어가고, 일반중학교 학생들이 중앙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12]. 또한 지역 출신 중학교 졸업생이 타지역의 중앙대학에 다니는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2015년에 혜산시 소재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증언자 (M05)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생활의 모든 면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즉 시험 기간에 교수들에게 주는 뇌물부터 생활비며 기숙사 비용까지, 움직일 때마다 돈이 들고, 따라서 지방 출신 학생이 평양으로 유학하는 것은 더 힘겹다고 증언했다. 한국이나 일반 나라들과 달리, 북한에서는 고학으로 돈을 벌면서 대학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집안의 지원 없이는 대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돈이 따라서지 않으면 (평양에서 또는 타지의 대도시에서) 대학생활 유지가 어렵다.... (순천시에서는) 보통 다과목소조 과외를 하면서 대학에 가려는 아이들은, 종합대학이나 중앙대학은 못 가더라도 지방 전문학교나 기술학교 같은데 1-3년 정도는 갔다가 군대간다" — F12-mother, 2017년 고급중학교 졸업생 아들의 모친

도-농간의 생활의 질과 교육의 질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큰 도시로 이동하려는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의 의지는 당연해 보인다. 학교 졸업 후 직장배치가 이뤄지면 그 지역이나 직장을 평생 벗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뇌물을 주고라도 대도시로 옮기는 것이 미래를 위해 도움된다는 이야기다.

> "공업단위와 농업단위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면 농장에서 빠져서 공업단위로 가려고 한다. 대학교에 가려는 이유도 농촌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서다. 농업간부학교에 간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 F03, 2017년 농촌지역 중학교 졸업

> "(살고 있던 군 단위를 떠나서) 딸을 대도시에 살게 하려고 학교에 뇌물을 주고 전학증과 학적서류를 떼서 큰 도시로 보냈다. 거기에 친정 자매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딸의 행정문건을 다니던 학교에서 뗐지만 대도시에 전학할 학교에 올리지는 않았다. 동생이 그 동네에서 인민반장이었기 때문에 문제 없었다. 애의 장래를 위해서 (졸업한 이후에) 시골에 사는 것보다 대도시에서 장사를 배우는 것이 훨씬 좋다고 판단했다." — F10-mother, 2017년 양강도 군 단위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딸의 모친

이 증언자 (F10-mother)는 임시방편이지만 딸의 주민등록과 학적을 어디에도 등록하지 않은 것은 학교생활과 청년동맹 등 정치조직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물론

[12] 김정원 외,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5년 12월, 231 p.

장기적으로는 주민등록 없이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졸업 후 단기간만이라도 이모들에게 장사와 사업을 제대로 배우면 장래 생활의 안정에 도움될 것이었기에 시골의 학교보다는 대도시 시장의 현장 경험을 쌓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 문제는 다만 지역간 교육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유발하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지역간 교통, 인적, 물적 이동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간 격차가 더 벌어진데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직업간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함경북도 온성군의 중학교 교사로 2000년대 초반까지 15년 여간 교직에 종사하던 증언자 (F13-teacher)는 "시골의 군 단위 중학교 학생들은 대학을 가야지 시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개념이 있다"고 설명했다.

3.2 성분 및 계층에 따른 차별

성분 및 계층에 따라 적용되는 교육 접근권의 차별 또한 북한 사회 전반에서 발견되는 인권문제로, 사회계층에 따른 차별이 교육 서비스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3년 사회안전부 (현 사회안전성) 출판사에서 발간한 '주민등록사업참고서[13]'에 따르면, 북한의 출신 성분 제도는 핵심, 동요, 적대 계층이라는 3대 계층으로 구분되고, 또 '성분'은 노동자, 군인, 사무원, 농민, 소시민, 상인, 등으로 직업 가운데 가장 오래 종사해서 본인의 세계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직업에 따라 규정한다.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2012년에 중학교를 졸업한 딸과 2018년에 졸업한 아들을 둔 증언자 (F11-mother)는 사회성분이 공식직업 배치 등 자녀들의 사회진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마디로 잘 설명했다. "노동자가 잘 살게 되는 경우는 없다. 아버지가 노동자니까 아들도 노동자를 벗어나서 살 수 없다." 증언자는 공식적으로 경제생활을 위한 적을 등록한 기관이 없는 '가정주부'로 등록돼 있으면서, 가내수공업으로 개인 돈벌이를 했다. 남편은 '노동자' 신분으로 공장에 적을 올려두고, 사경제 영역에서는 환전 브로커로 일하며 돈을 벌었다. 하지만 자식들의 진로에서 부친의 공식적 사회성분인 노동자가 되는 길 외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신성분 즉 토대와 계층과 성분은 상급학교 진학은 물론 직업배치와 사회 생활에서 승진과 발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의 역할을 한다. 또한 부모의 직업과 직종에 따라 자녀의 진로를 제한해 두는 '유리벽'과 같은 한계를 넘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에 더해 증조 할아버지 세대에서

[13] 박승민, 배진영, "[최초공개] 북한 사회안전부 刊," *월간조선 뉴스룸*, 2007년 7월,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0707100015

‘지주' 또는 ‘부농', ‘종파분자' 등의 출신으로 적대계층인 경우, 즉 토대가 좋지 않으면 학교 졸업 후 법 또는 당기관이나 정치적인 직업에서는 아예 배제 된다고 증언한다.

> “자기 실력만 있으면,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극소수의 아이들은 대학 가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하지만 토대에 문제가 있으면 (이후 사회 진출할 때) 물론 당간부나 법 관련 일꾼 등 큰 간부는 될 수 없다. 그 외에 일반적인 직종에서는 직업선택도 자기 능력에 따라서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전쟁시기 남한 출신자들은 행정적 정치적 업무를 아무 것도 시키지 않는다.” — F12-mother

2010년까지 13년간 교사로 복무한 한 증언자는 토대가 어떻게 상급학교 진학이나 사회 진출에 작용하는지 설명했다.

> "예술학원, 외국어학원에 예전에는 실력으로 갔는데 요즘은 간부 자녀들이 다 간다. 군대도 토대 좋은 집안 아이들은 담임교사가 알아서 편하고 좋은 군 병과로 빼내려고 노력한다. 적대계층 출신 학생들은 기술대학 정도는 진학이 되지만, 종합대학과 중앙대학으로 진학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생 본인의 학업성적이 특별히 우수해야 하며, 정무원 시험 순위가 높아야 한다. " — F14-teacher

>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지방으로 숙청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집 출신성분이 좋지 않았다. 내가 중학교 5학년 (고급중학교 2학년) 때 김정일 호위부대 5과(6과)나, 김정일 정치대학 같은데 가려고 지원했다. 하지만 나는 특수 선발 예비명단에 나는 제외됐다. 당간부 또는 보위기관 간부가 되는 것이 장래희망이었는데, 출신성분 때문에 희망하던 정치대학에 갈 수 없었다. 나는 신체적으로도, 학업성적이나 학교생활 모든 면에서 열등함이 전혀 없었지만 출신성분 때문에 정치대학의 예비 신체검사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이때 성분 차별이 피부에 와닿았다." — M08

> "아저씨(형부) 켠의 토대가 호위사령부 쪽이어서 집안이 좋다. (그쪽) 할아버지 대에 항일 무장투쟁에 참여해서 그렇다. 그래서 조카는 평양의 호위사령부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국돈으로 100만 원 넘어 뇌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아주 못 사는 집 아이들은 돌격대 같은데 탄원해서 가기도 한다." — F09-mother

3.3 경제력에 따른 차별

12년 의무교육제도 하에서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고 북한 사회주의 헌법 47조에서 선언했다. 하지만 현실에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현금, 현물, 노동력 등을 거둬들여 사실상 무상교육이 아닌 셈이다. 이에 따라 교사와 학교가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교육서비스 접근권에 제약이 나타난다.

일반 중학교의 한 학급 30-35명 인원 중 5명 내외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 부모의 경제력, 사회적 영향력, 권력 등에서 평균적으로 하위 10-15%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교사와 학우들에게 소외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나아가 이러한 학생들은 집안 생계를 돕기 위해 그리고 학교에서 받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교를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현상이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 즉 가정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교육접근권에서 소외될 뿐아니라, 교사들의 폭언과 냉대는 하위 그룹 학생들을 학교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교육에 필요한 재정과 예산 지원을 '보통교육법[14]'에서 '국가나 사회협동단체가 보장하라'는 규정을 정상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보인다. 또한 시, 군발전법[15]은 시, 군의 인민위원회가 후원단체를 정해서 학교를 현대화하도록 정했으나, 여전히 학교꾸리기와 학교 관리 운영은 학부모의 후원에 의지한다.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현금과 현물, 노동력의 각기 명목을 크게 분류해보면, 사회적 과제와 노력동원 차원의 요구, 학교꾸리기 등의 명목 등 학교 운영을 위한 요구, 그리고 교사 자신의 생계를 위한 요구, 등 세 가지로 본 현상을 파악해 볼 수 있다.

3.3.1 사회적 과제와 노력동원

한 달에 두세 차례 정도 사회적 과제 제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과제가 다 다르고, 학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노동이나 꼬마과제, 인민군대 지원 등이 다 혼재되어 요구된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 정확하게 무슨 명목의 사회적 과제를 얼마의 비용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14] 보통교육법 (2015 수정보충)년 제49조 (보통교육부문의 재정예산) "보통교육부문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의 예산으로 보장한다."
[15] 시, 군발전법 (2021년 제정) 제70조 (학교건설과 후원사업) "시, 군인민위원회는 지방자재를 최대한 동원하여 학교와 학생소년회관을 비롯한 과외교양거 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려주고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고 학교를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도와 주도록 하며 후원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대책하여야 한다."

빈도로 제출했는지를 증언자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거의 매일 내라고 한다는 증언이 대다수인데, 구체적인 항목을 질의하며 깊이 접근해 보면 한 달에 2-4차례 내려오는 사회적 과제 요구를 제출하라는 독촉을 거의 매일 받은 것으로 읽혔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과제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증언자들이 묘사하는 교사의 질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못 내는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서 왜 안 내냐고 질타하고 창피준다.” — F04

> “교사는 학생들 모두 앉혀놓은 상태에서 (못 내는) 애들을 일으켜 세워서, 남과 비교하면서 인신공격 한다. 매주 한번 정도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못하는 학생들은 매번 담임교사에게 욕 먹는다.” — M06

> "제 때에 내지 못하면 계속 앉았다 일어 났다를 반복시켜서 수치심을 주었다. 그리고 사회적 과제를 못한 학생들은 책가방을 학교에 두고 집에 가서 가지고 오도록 했다.” — F07

> “안 내면 계속 비판서써야 하고 정말 힘들다. 힘 들어도 우리 아들에게는 뭐든 다 해줬다. 못 내게 되면 가방을 안 돌려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서 가져오라고 시킨다. 그러니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 한다.” — F11-mother

> “선생들이 학생들을 거의 매일 추궁한다. 전교생이 모인 곳에서 과제를 못한 아이들을 앞에 쭉 세워서 망신준다.” — F12-mother

사회적 과제를 요구하며 교사가 학생들 대상 정서적 학대 수준의 질책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질책과 압박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학생이 한 반의 30-35명 학생 중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까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흥미롭게도 영재학교인 제 1중학교는 예외라며, “이런 일로 학교에 못 다니는 애들은 없다 (M02)”고 한다.

> "2014-2016년에 고급중학교 다닐 때였다. 학교 운영자금 마련 해야 하니까 오전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버섯따고, 밭에서 이삭줍고, 나무열매 따고, 돈 되는 것은 뭐든 학교에서 숙제를 낸다. 주말과 오후에는 이런 작업을 한다. 한 달에 10번은 넘게 한다. 농촌동원이나

노력동원에 부자집 아이들은 선생님이 알아서 빼주기도 한다. 우리 반에는 전체 50명 (시골 학교라 두 반을 통합해서 운영함) 중에 3-4명이 이런 부담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 F03

"겨울 군인 패딩을 만들기 위한 토끼가죽 내라, 아니면 시세에 맞춰서 돈을 내야 한다. 일주일에 3번 정도, 겨울에는 나무를 사야 하니까 중국 위안으로 50-100위안, 봄에는 50-100위안, 교실꾸리기 (교실 바닥을 칠하기 위해서) 크게 일년 2-3번 정도 낸다. 조금낼 때는 5- 10위안 (5000원 국돈)정도를 낸다. 30명 중 5-6명은 못낸다. 얘네들은 수시로 학교에 안 나온다. 한 반에 1-2명 정도는 이게 부담스러워 아예 학교에 안 나온다. " — F04

“한 반에 30명 중에 2-3명 정도는 항상 빚을 지고 사는 정도로 못 사는 집 아이들이다. 이런 애들은 아이들 속에서도 왕따이고, 내라는 걸 못내니까 선생님에게도 차별을 받는다. 하루 결석을 하면 뺨이나 팔, 다리 가리지 않고 때리기도 한다. 그래서 1-2명 정도는 아예 밭농사나 시장에서 장사하거나 돈벌이를 하느라 학교에 안 나온다.” — M01

“일단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차별하는 경향이 무조건 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주어지는 과업 (토끼 가죽, 파고철, 등 제출) 같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차별받는다. 학급에 절반 정도는 사회적 과제 때문에 다 어려워하는데 23-24명만 제적 인원이고 5명 정도는 학교에 못 나왔다.” — M06

거의 매일 진행되는 방과 후 노동에 대처 하는 방식도 여러가지 였는데, 돈을 주고 정기적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빠지는 방법도 있다. 한 증언자 (F10-mother)는 아들을 방과후 노동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소년회관의 배구팀에 가입시켰다. 그렇게하면, 오후시간은 아들이 배구 특별활동에 참여하니 방과후 노동에서 빠질 수 있다. 즉, 상위 10% 내외의 돈이 있는 집안 자녀들은 돈을 주고 빠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직접 노동에 참가해야 한다. 동시에 학급의 하위 10% 내외의 가장 열악한 가정 형편의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3.3.2 학교 운영 재원의 학생 부담

무상교육 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역 협동단체에 학교운영 재정에 책임이 있고, 시, 군발전법과 보통교육법 등에서 보는 바대로, 지방의 인민위원회가 학교의 교육 기자재와 설비들을 갖추기 위해 후원단체를 학교에 배치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조선중앙통신 2023년 4월 7일자 기사, “황해북도에서 교육지원열의 고조[16]”는 지역의 기관 기업소가 교육기관에 교육물자를 지원한 사례를 설명했다.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이 농업대학에 실험실습 설비를 구비해주었고, 도체신관리국, 도무역관리국이 액정TV와 컴퓨터 등 물자를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또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도검찰소, 도송배전부의 근로자들 또한 지역의 학교 돕는 일에 성의를 표했다는 기사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역의 공장, 기관, 기업소가 후원단체가 되어 학교 기자재를 책임지도록 법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기사가 소개한 황해북도의 예처럼, 소위 방식상학 단위(시범단위)를 거점으로 국가가 투자를 해주고는 전국의 학교들이 따라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교육에 만연한 전반적 물자부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를 위한 만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정 시기를 정해 집중적으로 모범 대상학교에 지원을 하고 이후, 그것을 좋은 모범 사례로 다른 지역에 적용되도록 권장하는 전통적인 북한의 사회적 캠페인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상 단위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 그 이후에는 다른 주변 지역의 재원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설명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역의 공장기업소 등이 후원단체로 학교의 교육자재를 책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역 후원단체의 지원물자를 투명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차치하고라도, 학부모들이 스스로 컴퓨터를 비롯해 각종 교육 시설을 지원했다는 증언들은 흔히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노동력과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학교꾸리기 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학교 내 도색과 교실 바닥작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 “(북한당국이) 2015년에 학교에 컴퓨터를 다 놓아라고 했는데, 교장이 학급 선생들에게 몇 대씩 내라고 배당을 시켜서, 학부모에게 받거나 선생님이 다른데서 돈을 벌어서 컴퓨터를 샀다.” — F12-mother

> “가을 겨울에는 화목을 내야되고 겨울에는 학교꾸리기를 하는데 석회를 내야 한다.” — M05

> “학교에 재정이 없으니까 학부형들이 모두 학교 운영을 책임진다. 사회적 과제 때문에 선생을 거두매 선생, 거두매 반장이라고 부르는 정도이다. 교사가 학생들의 학업과

[16] “황해북도에서 교육지원열의 고조” *조선중앙통신*, 2023년 4월 7일, http://kcna.kp/kp/article/q/1ad394a579b390a938aa5578059334a8.kcmsf

생활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사회적 과제나 물자를) 거둬 들이는데만 집중한다. 힘있는 학부모를 만나면 교사가 그나마 편하다. 돈있는 학부형이 있으면 사회적 과제 거두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다.” — F14-teacher

이렇게 ‘힘있는 집안' 출신 학생들은 교사가 학교에 제출할 과제를 해결해줌으로써 교사-학생 간의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 되고 학급 내에서도 다른 학생들보다 여러 방면에서 우위에 서게 된다.

"부모의 영향력이 큰 집안 아이들은 학생인데도 선생님과 같은 지도적 입장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명령 지시를 하고 다른 학생들은 그 학생을 따르는 것이 당연시 되어있다. 돈이 많아서 학교나 선생님께 돈, 페인트, 목재 등 많이 낸 사람들은 교실청소를 하지 않거나 오후에 학교에서 시키는 작업에 참가하지 않는다. " — F03

3.3.3 교사생계

교사의 월급이 3,000원대로 쌀 500그램 내외를 구입할 수 있는 가치이다. 따라서 교직을 직업으로 가지고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교사들은 극단적으로 적은 인건비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학부형들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처럼 되었다. 교육지원 활동으로 학교 인근의 협동농장에서 교사들 쌀을 제공한다는 증언도 있다.

"엄마가 선생님을 접대를 잘 해야 한다. 선생님 생일이나 집안 잔치를 꼭 챙긴다. 학급의 열성자들 (한 학급의 8명 내외로 구성된 학생 간부)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에게 선물과 준다. 식용유, 쌀, 등 주요 생계를 위해 선물을 준다. 2019년 경까지도 3,500원 정도 월급밖에 안 돼니까 학부모들이 선생님 생계를 챙겨야 한다. 교원들은 농장에 연결시켜서 인근 농장에서 쌀을 대준다.” — F09-mother

교사가 인건비만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학생지도나 교육보다 생계를 위한 돈벌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폐단이 나타난다. 월급은 적은 반면, 다른 직장처럼 근무시간을 활용해 8.3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를 통해서 선물과 뇌물을 받는 것이 유일한 돈벌이 방법으로 보인다. 이 같은 환경은 교사들의 수준과 실력 저하의 후과를 낳았다. 이 또한 이중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학생들이 국가의 공교육 체계에 대해 신뢰를 못가지게 됨으로써 북한의 공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의무교육제니까 학교 공부에 제약이 되는 것은 시스템에서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교원들이 국가에서 월급을 안 주니까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교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원들 월급이 3,300원 정도이니 먹고 살 수가 없다. 진짜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사교육을 받는다. 교사들이 실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오직 자기 벌어먹고 사는데만 관심이 있다." — F12-mother

"선생님 생일이나 집안 일 있을 때 많이 챙겨줘야 한다. 애 아버지가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일(환전 브로커)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하기 위해서) 일년에 두 세번씩 100위안 정도 돈을 줘야 한다. " — F11-mother

이런 형식으로 교사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집안의 학생들은 당연히 여러가지 방면으로 교사들의 혜택을 받기 마련이다. 평양에서 실시하는 소년단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추천도 받으며 언제나 교사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교생활이 수월하다.

"부모가 부유하여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기부를 많이 하는 학생에게는 성적이 매우 낮았지만 김일성소년영예상 등 상이 주어졌다". — M08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부모님이 선생님을 많이 챙겨주면 선생님이 아이를 더 잘 보살펴주는 것은 당연하다. 선생님이 (뭔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애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내고, 집에 오면 선물도 주니까 아이가 학교생활이 편했다." — F10-mother

"돈이 있어야 학교생활이 수월하다. 아무리 권력있는 집안이라도 선생에게 먹을 걸 안 주는데 애들을 이뻐하지 않는다. 교과서가 학반 아동 수에 맞게 나오지 않는다. 25명인데 20권 정도만 새 교과서가 나오게 되면, 학교에서 내라는 거 잘 내는 아이들, 선생님을 잘 챙기는 집안 아이들부터 내주고 나머지 5명 정도는 헌 교과서를 쓰던가 교과서 없이 학교 다니던가 한다." — F11-mother

3.4 여성에 대한 차별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17]은 각급 학교에 입학, 진학, 졸업과 그 후 직장배치에서 남녀평등의 보장을 보장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전공 분야 학과를 제외하고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교육 분야의 차별 현상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문제들과 함께 나타나는 식이다. 즉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비하 또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기인해 여학생들의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있어서 분명한 '유리 장벽'이 존재한다.

여학생들에 대한 교육영역에서 체계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학생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설명이 많았다. 여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서 차별적인 분위기가 보였는데, 남학생에게는 '남자가 공부를 안하면 어떻게 하냐" 또는 "대학교에 가야지" 이런 용기를 주는 말들을 자주 했지만, 여학생들에게는 학업성적에 대해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증언자(F07)는 기억했다. 즉 여학생들에게는 공부 하고 싶으면 하고 알아서 하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한다. 또 주변의 어른들, 아버지 친구들도 '여자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뭣하냐'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 "대학진학 자체는 여자여서 안 된다는 식의 차별은 없지만, 유교적 사고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서 '여자는 시집이나 가라'는 식의 인식이 퍼져있다. 또 남녀간 직업이 구분돼 있어서 대학도 다 구분돼 있다. 당일군, 보위원, 안전원 이런 직업에 지원은 남자만 한다. 여학생은 가난한 집에서는 대부분 농장일이나 쉬운 직업을 선호한다. 여자는 유치원 교양원, 교환수, 군수공장 경비서는 일 같은데 종사하는 것이 사회 통념이다. 그래서 대학 진학에서부터 차이가 갈라진다. " — F03

이 같은 직업에서 남녀 역할의 구분은 대학교의 성격에서 잘 나타났는데, 북한의 대학들이 대체적으로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과대학 중심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사범대를 제외하면 도별로 있는 대학 함흥, 청진 등 대도시 대학들이 공대 중심이며, 사범대만이 여성들이 주를 이루는 대학이라고 한다. 남학생은 다양한 부문의 학문과 학업을 전공해도 상관없이 직업배치와 진로에 가능한 범위가 넓다.

[17] 녀성권리보장법, (2015년 수정보충) 제3장 제19조 (입학, 진학, 졸업배치에서 남녀평등의 보장),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녀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각급 학교에 입학하거나 진학, 졸 업후 배치받을수 있는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경우 특수전공분야의 학과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리유 로 녀성을 모집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교육, 보건, 경공업 등 일부 제한된 분야의 학문과 학업만이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사회 전반이 남성 중심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향후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제1중학교의 경우도 남학생의 비율이 높다.

> "제가 제1중학교는 입학 당시, 대략 30명 학급 학생들 중에 여학우는 대략 4-6명 정도였다. 하지만 제1중학교에 온 여학생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평균적인 남학생들에 비해서 월등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교 내 생활에서 평범한 남학생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다. 민족 간부를 양성한다는 것이 제 1중학교의 취지이므로 여성간부의 비율에 따라 계획적으로 (여성 입학생 수를 조절) 하는 게 아닌가는 생각한다." — M02

중앙당 간부와 각 조직 대표 총 5,000명이 참석한 2021년 8차 당대회에 여성 참석자가 그 전 해에 비해 200명 증가했다고 자랑했지만, 501명으로 10%였다[18]. 북한 내 여성의 지도적 지위를 잘 나타내는 수치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계 지도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교사출신 증언자(F13-teacher)는 남녀차별은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진출 이후에 나타는데 공장기업소 지배인은 물론이고, 학교장 등의 지도자급에는 여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장래 희망 자체가 제한적이고, 남학생이 선호하는 직업군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여성들 속에는 정치, 법조계, 당일군 진출 희망은 전무하다.

[18] 정용수, 2021.01.07, "김정은 "경제발전 목표 엄청나게 미달했다" 실패 고백", 조선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63464#home

북한 교육 접근권 실태 조사: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교육 접근권은 개선되었는가

데일리 엔케이

DAILY NK

요약

북한 교육 접근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인 사회적 계층의 격차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대해졌음을 가정할 때,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입장과 수요가 반영된 연구의 의미는 매우 크다. 본 연구는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으며 학령기 자녀를 둔 내부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핵심 정보원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방식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최종 대상자 구성은 양강도 2명, 함경북도 5명, 함경남도 7명, 강원도 3명, 자강도 3명, 평안북도 6명, 평안남도 8명, 황해북도 4명, 황해남도 5명, 평양직할시 7명이다. 이 중 남성이 19명, 여성이 31명이다.

북한당국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을 도입하면서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학령기'의 자녀들이 의무 교육의 확대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성과 연결되어 있는데, 해당 정책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낮은 편이었다.

오히려 '진로'의 측면에서 대학 입시나 군입대를 상정한 경우, 1년을 확보한 것에 대한 의미가 컸고, 여학생 자녀를 둔 경우 졸업을 일찍하는 것이 가정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등 성분에 기반한 진로 및 성별에 한정하여 자녀의 교육 기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에게 재정부담을 지우는 '세외 부담' 의 측면에서 교육 연한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었는데, 학생들 스스로 학교를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노력 동원 및 과제 부담(33.3%)' 이 차지하여,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준다. 다른 이유로는 학교생활에 흥미가 떨어지는 모습(24.4%)과, 토대로 인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15.4%),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택한 경우(14.6%), 학교 교육 내용에 불만족(11.4%), 기타 응답(0.8%)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 출석률은 전체의 50%이상(40%), 80%이상(40%)[19]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된 결석의 이유로는 가정 경제의 어려움(43.4%)[20]이 꼽히며, 학부모 또한 자녀를 학교에 출석시킬

[19] 전체 100% 응답 중 한 학급의 30% 이상의 출석률은 6%, 50%이상이 출석하는 비율은 40%, 80%이상이 출석하는 비율은 40%, 100% 출석하는 비율이 14%로, 전체의 46%에 달하는 대상자가 속한 학급이 80% 미만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었다.

[20] 다른 이유로는 거리두기 조치(32.1%), 기타응답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18.9%), 강화된 출석 관리로 더 많은 학생이 출석한다 (3.8%), 정치사상교육 단속으로 더 많은 학생이 출석한다 (1.9%)순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나타난다.
사회적 계층에는 성분과 자본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자녀의 지식과 능력을 키우거나(40.7%),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는(32.3%)과목[21]을 중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주로 이러한 과목을 중심으로 사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 당국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정책의 방향에 따라, 컴퓨터, 과학기술, 그리고 외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대학 입시가 사회적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의도 매우 높았다.

주요 과목의 교육 수준은 교원의 질이나, 기기의 적절한 공급에 달려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 학교 및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소외되고 있다. 컴퓨터의 경우에도 수재(22%)이거나, 가정교사나 가정 내 컴퓨터를 갖추어 학습한 경우(61%)[22]에 학습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곧 수도권 중심의 부유한 계층과 농촌 지역 및 지방의 소외 계층 간의 학습 기회의 불균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정적으로 학교의 재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주체는 학교(58%) 및 학부모(19.2%)[23]였으며, 부족한 것은 디지털 기기(32.4%)뿐만 아니라, 겨울 난방 땔감과 식수(29.4%), 교과서 등(25%)[24] 최소한의 물자공급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종합적으로 계층 간의 편차를 보완하고 최소한의 학습 의지를 유지하게 만드는 국가 차원의 조치가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의 의견이나 불만 제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며, 모든 부문에서의 정책 집행은 재정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틀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될 필요성이 강조된다.

[21] 자녀가 학습을 하는 데 순수한 흥미(10.2%), 학교생활 평가에 도움이되는 (5.1%) 과목이나,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교과목(3.1%)에 대한 관심은 낮았다.

[22] 주로 특수기관 교육을 받은 수재(22%)보다 가정교사 및 가정 내 콤퓨터를 가지고 학습한 학생들이 콤퓨터를 잘 다루는 비율(61%)이 월등히 높아 계층적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집중적 교습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13.6%에 그쳤다. 일반학생이 모두 다 잘 다룬다는 답변은 3.4%였다.

[23] 학교 운영의 재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은 학교(58.9%), 학부모 (19.2%), 교육부 (8.2%), 청년동맹 (8.2%), 도당위원회 (2.7%), 어떤 기관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2%) 순이었다.

[24] 학생들에게 긴요한 기타 물품으로는 책상, 걸상, 칠판, 교편물 등 기본적인 자재(8.8%), 체육기자재, 음악기재 등 예술계열의 자재(4.4%)순으로 나타났다.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교육‘권’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통제와 적절한 조정을 할 의무를 가진다.

교육 정책에 있어, 특히 김정은 집권기 들어 눈에 띄는 일련의 변화를 보여왔다. 다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는 명확히 분석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교육 정책 부문에서는 국제 메커니즘의 일부를 수용하면서 외부세계를 대상으로 선전을 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일어나고 있으나, 전 계층, 전 지역에 ‘보편화’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정책이 수사에 그칠 뿐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계속 고립돼 있고, 국경 봉쇄 등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25] 나아가 이동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탈북민 급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북한 정부의 새 조치 등도 외부 세계의 북한 내부에 대한 정보 접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능동적인 의견 수렴과 개진이 어려운 북한의 환경을 방치하지 않고 외부 사회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미비점을 비판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겠다.

그동안 북한 정책과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중심은 북한당국이나 교원들에 한정되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부문의 개선이 시급한지를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행위자로서 교육 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 및 가정 단위의 수요와 한계점을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유동성이 떨어지고,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자생적 영역도 축소가 된 상황에서 북한의 교육 환경의 열악함은 어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지를 긴급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본 조사를 통해 국가의 정책적 방향과 노선이 북한의 교육 현실과 맞닿아

[25] 살몬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살몬 보고관 첫 보고서 유엔 제출…“중러, 탈북민에 ‘강제송환금지 원칙’ 적용해야”, 2022년 10월 15일자, VOA, https://www.voakorea.com/a/6790547.html

있는지를 점검하고 적실한 대안 마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1.1 연구 방법 및 조사대상자 정보

1.1.1 연구방법

조사 내용은 총 50명의 북한 내부 주민의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양적 연구를 통해 전반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사 대상자에 있어 지역별 편중성을 탈피하여 고른 지역의 대상자를 섭외하였다.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조사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조사 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내부에서 생활하며 경험하는 현실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조사 방식은 핵심 정보원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응답자 집단으로 시작하여, 이 응답자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방식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북한 공안 기관과 중앙당에 복무하는 내부 정보원을 포함하였다.

해당 질문에 대한 조사대상자 특성별 구분을 위해 기본적인 성별, 연령대, 거주 지역, 최종 학력, 직업군을 질의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자신의 가족 내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상정하여 내용을 답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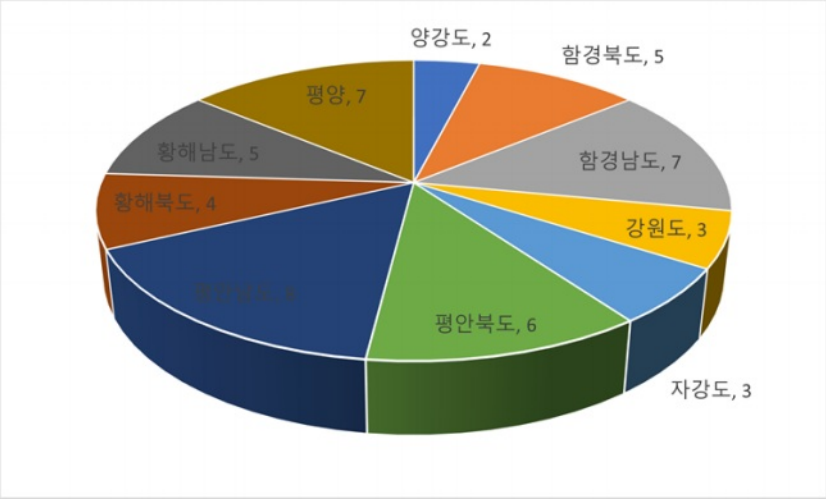
조사 진행 사실이 노출되면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피해자나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점이다. 본 보고서의 내용 안에서 개인의 정보 혹은 정보 습득의 방법을 최소한으로 공개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설문을 진행하며 조사대상자들에게 보안성을 약속하였으며, 이는 조사 시점과 대상자를 특정하는 정보를 최대한 노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충한다. 따라서 해당 가족의 성별, 연령, 학교 지역 및 단위만을 질의하고 있으며, 성명, 학교명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질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읽어내기 위해 북한에서 표방하는 교육 정책 변화와 기존 교육 현장을 분석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요 차별적 요소를 도출해 내어 이를 중심으로 질의하였다. 국가 정책 이면의 동기를 읽고, 북한의 있는 그대로의 교육 현실을 충분히 분석해내어 북한 사회에 적실한 교육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1.2 조사대상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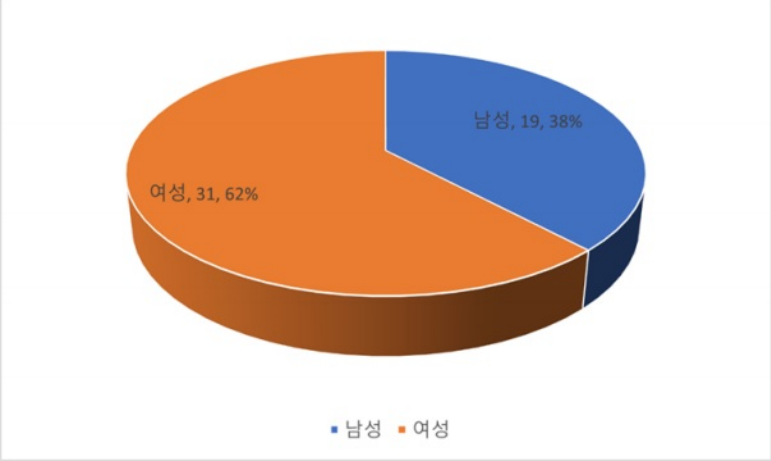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는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신분의 북한 내부 거주 주민 50명으로 한다. 조상 대상자 분포 지역은 2008년 UN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가구 수 비중 할당을 따른다. 조사 시기는 코로나 시기로 보안성으로 인해 특정 일을 밝히지 않는다. 보안에 관한 특별한 고려를 통해, 조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사가 진행완료 되었고, 지역 분포는 다음과 같다. 양강도 2명, 함경북도 5명, 함경남도 7명, 강원도 3명, 자강도 3명, 평안북도 6명, 평안남도 8명, 황해북도 4명, 황해남도 5명, 평양직할시 7명이다. [그림1]

[그림1] 조사대상자 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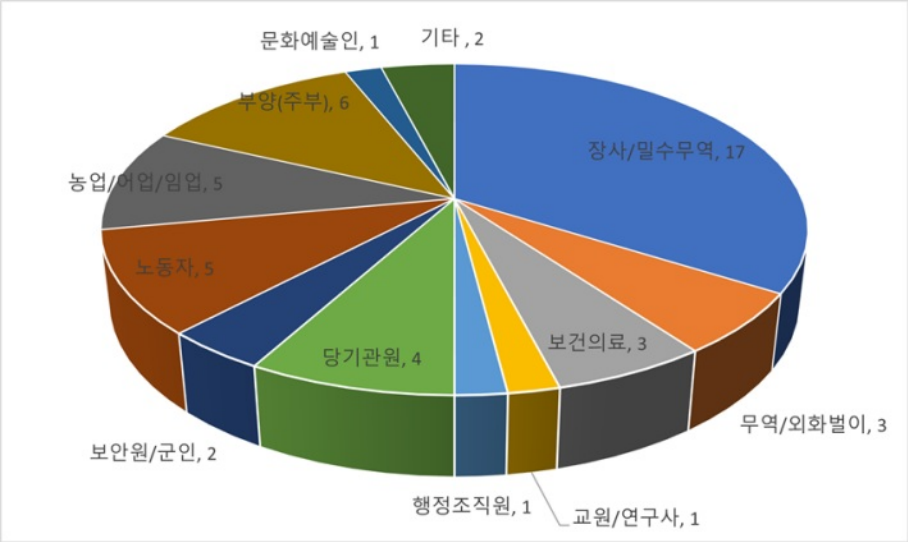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성별은 남성이 19명, 여성이 31명이다. [그림2] 연령대는 30대가 17명, 40대가 25명, 50대가 6명이다.

[그림2] 조사대상자 성별 분포



직업군 분포는 교원이 1명, 일반 노동자가 5명, 농업/어업/임업 종사자가 5명, 당기관원 4명, 무역/외화벌이 종사자 3명, 보건의료 종사자 3명, 보안원/군인 2인, 부양/주부 6인, 장사/밀수 무역 종사자 17명, 행정 지도원 1인이다.

[그림3] 조사대상자 직업 분포



조사 대상자들의 학력은 고급중학교 졸업이 19명, 단과대학, 고등전문대학 졸업이 6명, 대학 중퇴가 6명, 대학 졸업이 17명, 박사원, 연구원을 중퇴하거나 졸업한 대상자가 2명이다.

조사 대상자 수입 규모는 월평균 300,000원 미만이 19명, 300,000원~500,000원 13명, 500,000원~1,000,000원 6명, 1,000,000원~2,000,000원 6명, 2,000,000원 이상이 5명[26]이다.

조사대상자의 자녀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체 학생 중 남성은 26명, 여성이 24명이다. 연령대는 10세 이하가 9명, 10대가 35명, 20대가 6명이다. 출신지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위치는 3명만이 상이하다. 출신지역 분포는 양강도 2명, 함경북도 5명, 함경남도 7명, 강원도 3명, 자강도 3명, 평안북도 6명, 평안남도 8명, 황해북도 4명, 황해남도 5명, 평양직할시 7명이다. 학교 위치의 분포는 평양이 9명, 함경북도가 4명, 함경남도가 6명, 이하 양강도 2명, 강원도 3명, 자강도 3명, 평안북도

[26] 통상 북한 주민의 수입은 국가 소속으로 받는 월급(생활비)와 부수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 장사/밀수, 2)무역/외화벌이 등의 월소득을 측정하기 어려워 년단위 총 소득으로 답변할 시 12개월로 나눠 산정하였다. 부양의 경우 남편소득을 기재할 지 월수입을 산정하여 반영하였다. 교원, 노동자 등, 공식적인 월수입을 응답하였다. 비합법적 수입과 공식 수입을 동시 기재할 경우 합산하여 월소득으로 산정하였다.

6명, 평안남도 8명, 황해북도 4명, 황해남도 5명로 동일하다. 재학 중인 학교는 유치원 2명, 소학교 13명, 초급중학교 11명, 고급중학교 17명, 단과대학, 고등전문대학 재학 1명, 대학 재학이 6명이다.

1.2 선행연구검토

북한 교육 상의 문제는 다양한 측면의 고찰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의 북한 교육 관련 연구는 북한 정치사상 연구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거나, 남북한 교육 제도의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 교육의 내용에 대한 세부 연구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북한 교육 상의 권리, 특히, 교육접근권에 대한 논의는 국제 메커니즘 상에서 표피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깊이 있는 연구주제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북한은 강성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27]를 설정하였고, 이윽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법령 제정[28]이 2012년 9월 김정은 집권기와 맞물려 가장 큰 변화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이 의무 교육 학제[29]를 개편한 사실은 당국의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 수준을 보여준다. 특히,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학제 개편은 북한 교육의 기제가 크게 변화하였을 것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북한 교육에 있어서의 균등한 권리 보장 여부를 주목하게 만들었다. 기술인재라는 '기회'와 의무교육 확대를 통한 '보편성 획득'은 북한 교육에서 실질적인 '평등'이 마치 구현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든다.

통상 정책적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불러올 것을 상정해 보았을 때, 교육 정책 수립과 그 과정은 북한

[27] 2015년 개정된 교육법 제8조에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전망과업"이라고 하였다. 김지수, "제7차로동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 『통일교육연구』, 제14권 제2호(2017), p. 1.

[28]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전반적인 12년제 의무교육으로의 확장 (2) 졸업후 대학, 군복무, 사회생활에서 학습과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체 학습 능력을 준비시키는 것. (3) 최종 목표를 중심으로 각 학교급별로 도달 목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학과목에 대한 규정과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학년별로 명시함. (4) 학교급별로 교육내용과 방법에서 체계성과 순차성, 균형성과 계속성, 통일성과 연관성을 보장하는 것 (5)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반복심화 형식의 교육 구조를 가짐 (6) 통합과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방식을 적용 (7) 주체성과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갈 수 있도록 교육 강령을 구성 (8)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교육내용, 교수과정을 계획 (9) 새 교육 강령은 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발전을 담보하는 법적 문건임.

[29]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실행한 주요 교육개혁 정책으로는 의무교육기간 확대(11년에서 12년으로), 학제개편(4-6학제에서 5-3-3학제로), 교육과정 개정, 기술고등중학교 신설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교육법과 교육강령집행법, 직업기술교육법 등을 새로 제정하였다. 김병연, 김지수,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조건과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1호(2019), p.176.

교육 당국의 의도, 실행,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문에 대한 연구가 김정은 집권 이후의 교육정책 변화와 함께 증대하였다.

김석향과 김경미(2017)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로동신문』에 수록된 기사를 검토하여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당국이 가진 의도와 영향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자 김정은의 의도는 북한 사회 전역에 효과적으로 투사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선적으로 의무교육 학제 개편이 정책화 된 의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제도의 실시는 "인재양성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있으며, 방법으로는 "교육조건과 환경"을 보장하며 교육 사업에 "국가적 투자"를 늘리겠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30] 그런데 교육 조건과 환경개선 사업은 2015년 이래 학교 교원, 기관이나 지역 일꾼에게 역할을 할당하거나, 2016년에 이르러는 '70일 전투'를 통해 학부모 중심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전한다. [31] 이로써 연구는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자체가 북한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병연, 김지수(2019)는 김정은 시대 학교교육의 변화에 주목하며, 북한 문헌 분석과 면담을 통해 이것이 교육목표와 실질적으로 조응하는지, 즉 교육정책의 실행 수준을 점검하고,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북한 사회의 성격과 변화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북한 배경 학생 면담 결과는 교육 시설의 다기능화 정도가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이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여 능숙한 활용도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업 추진이 아니라, 학교 단위의 책임제로 운영되는 학교 정책의 한계, 특히 일반 교원들에게 학교환경 개선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하였다.[32] 한편, 교원복지 차원의 중앙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 기관, 기업소, 단체를 중심으로 '후원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었다.

김지수 (2019) 은 북한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유 · 초 · 중등 교육 연구에 주목하고 사회 제도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교육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북한 교육에서 경쟁이 격화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영어교육의 강조, 정보기술 과목의 시수 확대, 교수학습 활동에서 멀티미디어 사용 독려 등의 세계적 추세의 반영을 특징을 꼽았다. 이에는 교원 정책의 변화도 함께 뒤따르는데,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원의 생활 안정에 관한 지원들이 교원법 및 교육강령집행법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0] 김석향, 김경미,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분석," 2017 p.122

[31] 김석향, 김경미, 2017, 위의 글, P.125

[32] 김병연, 김지수, 2019, 위의 글, p.192

한편, 지역의 후원단체와 학부형들의 기여가 학교 교육조건 및 환경개선에 큰 부분을 차지하여, 지역적 격차와 학교별 격차가 큰 상황, 이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교육신문, 2016.05.12.)으로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일구 (2018)은 남북의 교육통합 과정에 대한 적실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방과후 활동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헌연구, 면담, 설문지 조사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 방과후 활동이 교육 활동의 다양성 측면에서 유효한 기능을 가지기 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조현정 (2022)의 연구에서 자녀의 사교육에 투입되는 학부모의 지원이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족의 사회적인 배제 정당화로 이어지며, 북한의 교육열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교육격차와 계층분화라는 부정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의무교육의 확대를 포괄하는 북한 교육 정책의 변화는 교육 자체의 목표인 사회인으로서 갖춰야할 덕목을 기르는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하는가, 그리고 국가가 설계하는 사회 인재상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가의 종합적인 점검을 필요로 하고 있다.

1.2.1 연구 범위

실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다루어야 할 영역은 매우 광범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기 북한 학교를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학생을 대신하여 학부모의 입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청취하였다. 북한당국이 내세운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짚고, 이로부터 보편적인 교육접근권이 확보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자, 지표를 수립하기 위한 초기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접근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의무교육제도'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해당 권리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차원의 제도이다. 따라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 교육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을 내포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기인한다.[33] 북한의 학교에서는 사상교양[34]의 과도한

[33] 전재황,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2014, 제20권 2호, p.25.

[34] 2014년 발간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유년기부터 최고지도자('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사상교양체계를 운영하고

비중 및 강제동원 등의 이유로 기본 교과목을 통한 올바른 정서함양과 사회인으로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습득 기회의 박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접근권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며, 북한 사회 내에 잠재해 있는 성분, 계층[35], 성별에 따른 차별적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은 교육접근권에 중요한 작업이다.[36]

교육 기회에는 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의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보다 나은 자원을 갖추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로 진학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특정 지역이나 학교별로 제공하는 교육의 수준 차이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행연구 검토 내용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교원의 전문성 차이, 도-농간 격차, 사교육 활성화, 뇌물 관행의 만성화 등이 북한 학생들로 하여금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이 필요하다.

본 조사는 광범위한 연구 교육접근권의 현재성 점검에 의의를 둔다. 제2장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의무교육 연장이 학부모들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하고 무엇이 학생 그리고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로부터 이탈을 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교 교육 내용의 질과 보완방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구하며 과외 및 소조활동의 실질적인 역할과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비단 과외 뿐만 아니라, 당국이 표방하는 무상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중첩되어 과중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부족한 물적자원 항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어느 정도의 비중이 전가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노력 동원 수준까지도 함께 살펴본다.

과중한 재정적 부담과 학생들의 피로도는 교육에의 의지를 약화시켜, 교육을 받는 기회를 상실하고 학교로부터 이탈 현상을 발생하게 만든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교육 접근성에 대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연령대를 막론하고 북한 주민의 거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35] 위 COI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스스로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등, 무차별 그리고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차별이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심각하게 계층화된 사회로 이러한 차별은 (중략) 북한에는 정부가 조장하는 차별이 만연해 있으나 점차 변화를 겪고 있다.

[36] 연구 범주를 좁히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교육접근권은 제외한다.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취학학생과 재학 당시의 과외 교습, 고등교육으로의 진학 기회, 지역 및 도농간 격차에 관한 인식 문제점을 고찰하겠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찰하며 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접근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여 우리의 대응과 방향성을 제시하겠다.

2. 부문별 실태 점검 결과

2.1 의무 교육 기간 확대 정책의 도입과 실태

의무 교육 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은 북한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지식수준, 북한의 교육 환경을 둘러싼 주요 고려 사항이 무엇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의무교육의 확대로 독해와 문해력 등이 누구나 가진 기본적인 소양이 되며, 살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어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데 균등한 자질을 갖추게 된다.

2.1.1 '교육' 수준 개선에 대한 인식 차이

의무교육의 연장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의견[2-1]은 긍정과 부정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약 3분의 1에 해당(32%)하는 학부모들은 의무 교육의 확대로 인해 학령기의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학부모들은 '하나라도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이 좋다(함남3)',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제일 남는 것이다(함남5)', '공부를 더 해서 나쁠 것이 없다(함남7)'라며 기초 지식을 기르기 위한 의무 교육 취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표1] 의무교육 기간 확대에 대한 의견 (질문 2-1)

구분	빈도수	비율(%)
1. 좋다.	16	32
2. 나쁘다.	18	36
1.2 모두 선택	16	32

북한은 의무 교육 연한의 확대와 동시에 중등 교육을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나누고 실험 실습을 강화하는 등 정책 변화도 함께 진행했는데, '초급, 고급으로 갈라져 있으니깐 지루하지 않다(평양7)', '교육의 질이 좋아져서'(황북2과, 황북3) 등 이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도 감지되었다. 교육 정책의

변화와 의무교육 제도 개편의 연관성과 그 효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36%) 중 일부는 학교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했다. '과정 년한(연한)만 1년 늘어났고 구체적 과정안/교수안/교재/교육 형식에 늘어난만큼 알맹이가 없다.(자강3)', '소학교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됐으나 특별히 실력이 높아지진 않는다.(황남2)', '학교가 1년 늘었다고 해주는 교육수준개선은 없다.'(강원2) 등 불만 섞인 목소리도 존재했다. 이는 북한 사회 내에서도 학생 맞춤형 학습 진행이 어려운 점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것과 동일한 지점이다.

2.1.2 '진로'와의 연결

의무 교육 연한의 확대는 학부모들에게 고급중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와 함께 고려되고 있었다. 통상 학생들은 고급중학교까지의 의무 과정을 필수[5-2]로 이수(83.6%)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학부모에 따라 희망하는 교육 기관이 상이[5-3]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높은 선호도를 가진 교육 기관은 평양외국어 학원(37.9%), 금성학원(13.8%)으로 설명하고 있어 성분이 좋은 가정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을 희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기술고등중학교(17.2%)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토대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는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학생의 진로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은 자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행 학습, 사교육이 치열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고등중학교 과정을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시기로 인식하여 '1년 더 준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학부모는 단 두 명(평양1, 평양3)이었다. [37]

이에 반해 대학이 아닌 일반 직장 생활이나 군 입대를 상정하고 대답을 한 학부모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아이를 오래 데리고 있을 수 있어서'(평남6, 평남8), '16~17살 고등중학교 졸업나이가 너무 어렸다.'(강원3, 자강1) 등 일찍 아이를 사회로 진출시켜야 하는 부모의 애처로운 심정을 내비쳤다. 특히, '남자는 군대나가야 한다. 16~17살 신입병사로 나가는 것 너무 어렸다. 한살이라도 늦게 집에 있다 나가서 좋다.'(황남1) 등 자녀가 군에 입대를 가능성을 두고 의무교육 연한의 확대를 환영하였다.

진로와의 연결 지점은 '의무 교육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37] 그들은 평양지역에 거주하면서 학부모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각각 외화벌이 사업으로 수입이 상당하거나, 수입은 적지만 행정지도원으로서 복무하고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장기적인 군복무기간을 고려하면 되도록 빠른 졸업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함남1, 평양4)을, 여학생의 경우, 졸업을 일찍 해서 장사(함남6)나 직장생활(함남4, 평남5)을 하고 돈을 벌어 시집 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성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구분을 뚜렷이 보여주는 답변이었다.

2.1.3 '세외부담', '노력동원'의 부담감

의무교육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학부모에게 재정적 책임을 지우는 '세외부담'에 있었다. 교육 연한이 늘어나는 것은 곧 학부모가 학생을 뒷바라지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다닐 때처럼 11년제가 좋았다. 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평양2), '학교 졸업할 때까지 얘 (돈)시중 들어야 해서'(함남4 외 6인) 등 학부모들은 부담감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세외 부담에 대한 부담감은 보기 1,2 모두를 선택한 학부모들의 의견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들은 교육 정책에 대한 우호적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비용, 세외 부담, 교원 지원 등의 비용적 부담이 이를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의무 교육이 필요한가[2-2]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에 반드시 가야 한다, 보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90%에 달하며,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0에 수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주된 이유[2-3]는 좋은 성적을 획득하여 대학에 가는 것을 자녀 교육의 주요 목표로 하기 때문(27%)이라고 밝혔다. 보내지 않아도 좋다는 소수 의견 중 주요 한 이유[2-4]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이탈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2.1.4 코로나 위기 속 이탈자의 발생률과 조치

코로나라는 열악한 외부 환경적 요소는 학생들의 출석률에 영향[2-8]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의 50~80%이상의 학생이 출석하는 것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 학급의 출석률이 80% 이하에 그치는 경우도 46%에 달한다. DailyNK의 후속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출석률 변화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평균 약 70%의 출석률이 보장되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공식적으로 집계된 가장 낮은 출석률은 50% 수준으로 나타나 조사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38] 그러나 북한은

[38] 이채은기자, '새 학년 시작됐지만 학생 출석률 저조… "가정형편 어려워서…"', 2022년 4월 7일자,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20407-1/

아동권리협약(CRC) 5차 보고서(2017년 6월 15일) 에서, 각급 학교 출석률은 98%이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밝혀 북한의 보고서는 전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표2] 코로나 위기 하 출석률 (질문 2-8)

구분	빈도수	비율(%)
1. 100%	7	14
2. 80% 이상	20	40
3. 50% 이상	20	40
4. 30%이상	3	6
5.거의 출석하지 않음	0	0

코로나 시기 출석률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유[2-9]는 가정 경제의 어려움(43.4%)[39]이고, 거리두기 조치(32.1%), 기타응답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18.9%), 강화된 출석 관리로 더 많은 학생이 출석한다 (3.8%), 정치사상교육 단속으로 더 많은 학생이 출석한다 (1.9%)로 나타났다. 현재의 위기는 의무 교육의 이탈자들을 다수 양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 경제 어려움은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면, 단순히, 학기 초에 학용품이나 학교에 갈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데 드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40]그러나 부모의 사망이나 부모의 한국, 중국행 등의 행방불명 상태로 10대 가장의 상태에 놓인 경우[41]나, 부모의 일손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에 내야 하는 과제의 부담으로 학습 의지가 높지 않은 경우도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여학생의 경우, 북한 여성들이 가정 경제 부양을 책임지는 탓에, 어머니를 돕거나 어머니를 대신하여 온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도맡게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출석률이 낮은 상황은 시 교육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시 교육부에서도 별다른

[39] 최근 기사에 따르면 함흥시 소학교 출석률 이 60%에 그치는 주요 원인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기되는 경제적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여 담임 교원들로부터 비판받자,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채은 기자, '당 창건일 꽃바구니 비용, 소학교 학급 내 '이들'에게만 거뒀다', 2023년 10월 11일자,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31011-1/

[40]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년 3월 열린 전원회의에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복과 가방을 공급하라는 과업 지시를 하달한 바 있다. 이채은 기자, 2022년 4월 7일자 위의 기사.

[41] 이 소년은 어머니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떠안게 됐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했지만, 어머니가 사망하고 나서부터는 집에 벌이를 하는 이가 없어 가족 전체가 끼니를 굶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전언이다. 이채은 기자, '어린 나이에 집안 가장된 청진시 10대 소년, 손수레 끌어서...', 2023년 9월 18일자,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30918-2/

대책이 없어, 학교 교장들에게 학생들의 출석률을 보장하는 단순 조치가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교원에게 전가되었다.

통상 학교 교육으로부터 이탈자들이 발생할 시[2-6], 일정 기한 이상으로 결석을 하는 경우에 졸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42]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이 취하는 조치[2-7]는 선생님 및 학급 학생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출석할 것을 고지하는 형식(58%)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생활 총화 및 처벌을 통해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강제성(30%)도 나타나고 있다.[43] 그러나 학교장이나, 학교 여건에 대한 '물질적 기여'를 통해 '졸업 가능 요건'에 미충족하더라도 이를 무마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는 응답도 존재해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은 특혜를 받는 차별적 구조임을 알 수 있다. [44]

2.2 학교 교육 내용의 질과 보완 방안

2.2.1 중요 교과목에 대한 인식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3-1]은 북한 교육의 방향성과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 학부모의 중요 교과목 선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중복응답) (질문 3-1)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자연과학	도덕	미술	체육	기초기술	음악	역사	조선지리	혁명력사	콤퓨터	기타
응답	19	26	41	15	3	2	5	2	6	0	1	3	20	3

[42] 가족 중 사망이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결석한다. 퇴원해서는 다시 출석한다. (함남3), 월에 30일 중 25일 수업 중 3일 결석까지 가능한다.(자강1) 결석은 병결로 한 학기 10일 이하 가능하다(강원2)

[43] 그외답변으로는 등교해야 하는 최소일자만 출석하면 놔둔다 4%, 잘사는 경우 뇌물을 제공하면 놔둔다 8%이다.

[44] 교장하고 사업하면 졸업증 해준다.(함남6), 학교 현대화에 기여하거나 전국경연에 참가하는 경우(강원1), (결석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학교 건설 운영자금에 이바지 한다.(황남1), 학교나 유치원 꾸리기 자금을 지원한다(황남5)

해당 과목을 고른 이유[3-2]로는 첫 번째, 자녀의 지식과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40.7%)이고, 두 번째,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기 때문(32.2%)이다. 순수하게 자녀의 흥미도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특히, 1순위로 나타난 영어와 2순위인 수학의 경우 고급중학교 진학 이후 더욱 집중적으로 교육되고 대학입시에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사교육의 주요 대상 과목이기도 하다.

이 외에 컴퓨터, 자연과학이 높은 선택을 받았는데, 북한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표방하여 지식수준과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기조를 표명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기술중등학교가 개교하여 최소 1가지의 현대적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 내용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기회 창출 등 교육 정책 전반적으로 기초과학, 컴퓨터 등이 중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학부모들의 인식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4] 콤퓨터, 과학기술, 외국어교육에 대한 평가 (질문 3-4)

구분	콤퓨터	과학기술	외국어
1. 좋은 교육이다.	47	42	40
2.불필요한 교육이다.	3	8	10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컴퓨터, 과학기술, 외국어 교육에 대해 좋은 교육이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3-4] 그런데 해당 교과목의 교육 수준은 실제 학교에서 코로나 및 경제난으로 인해 기대치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2.2.2 교육 내용 부실성과 과외에 대한 의존도

실제로, 위 세 과목에 대한 교원 능력이 충분한가[3-5]에 대한 질의에 선생님에 따라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준비하며(42.1%), 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난다(36.8%), 수업 준비가 미흡하다(17.5%)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표5] 교육 수준에 대한 평가 (질문 3-5)

구분	빈도수	비율(%)
1.미흡하다	10	17.5
2.교사의 개인적인 준비	24	42.1
3.지역에 따라 수준이 다름	21	36.8
4.국가 수준의 교육이행	1	1.8
5.관심없다.	1	1.8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이 해당 과목의 특기를 갖추는가[3-6]에 대한 현실적 파악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실제 컴퓨터를 잘 다루는 학생들이 가정교사나 가정 내 컴퓨터를 갖추어 학습한 경우(61%)라고 인식하고 있었다.[45] 혹은 수재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에 컴퓨터를 잘 다룬다(22%)고 밝혔다. 학교 교과과정 내에서의 질좋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가정교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컴퓨터나 외국어 등 실리적인 교과목의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정치사상 교육의 비중을 늘리는 것에 대한 질의[3-7]에서도 발견되었다. 정치사상 교육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불필요하다라는 응답이 90%에 달했다. 불필요한 이유[3-8]는 이미 교과 과정 내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40.4%), 컴퓨터나 외국어 등 실리적인 교과목의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36.2%)하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학교의 국가 정책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면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3-8] 많은 수의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과외를 시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한다(39.2%)고 답변하였다. 거주이동의 제한 등 학교를 변경(24.1%)하는 것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과외교습'은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마저도 비용이 없어 포기한다(15.2%)는 의견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빈부격차에 따라 학습 발달의 격차도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국가나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여 고치도록 한다는 의견은 단 2.5%에 머물렀다.

2.3 무상 교육 실태

2.3.1 학교 재정 책임 주체

북한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무상 교육'이다. 학교 운영의 재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누가, 얼마나 지느냐의 문제는 '무상 교육' 실현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의제이다.

[45] 주로 특수기관 교육을 받은 수재(22%)보다 가정교사 및 가정 내 콤퓨터를 가지고 학습한 학생들이 콤퓨터를 잘 다루는 비율(61%)이 월등히 높아 계층적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집중적 교습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13.6%에 그쳤다. 일반학생이 모두 다 잘 다룬다는 답변은 3.4%였다.

[표6] 학교 운영의 재정적 책임 기관 (질문 4-1)

구분	빈도수	비율(%)
1. 군 도당위원회	2	2.7
2. 교육부	6	8.2
3. 학교	43	58.9
4. 청년동맹	6	8.2
5. 학부모	14	19.2
6. 어떤 기관도 책임지지 않음	2	2.7

학교의 재정적 책임에 대한 질의[4-1]에서 학부모 대다수는 학교 스스로가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음(58.9%)을 밝혔다. 두 번째로는 학부모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견(19.2%)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학교가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이면에는, 학교의 책임이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50명 중 무려 39명의 응답자[4-2]가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수시로, 비자발적으로 낼 것을 강요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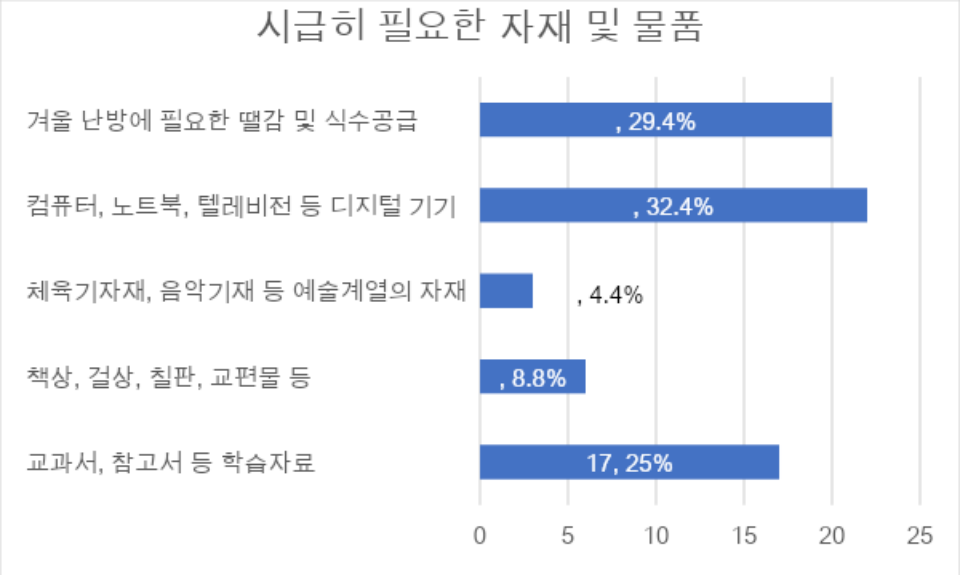
2.3.2 부족한 물적 자원

학교에서 재정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항목은 과연 어떤 것일까. 현재의 상황에서 학교에 무엇이 부족한가[4-3]를 살펴보면,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것은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등 디지털 기기(32.4%)로 나타났다.[46] 다음으로는 겨울 난방에 필요한 땔감[47]과 식수 공급(29.4%)과 교과서, 참고서 등 학습에 필요한 자료(25%)로 나타났다. 무상 교육을 표방하는 북한에서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땔감 및 식수가 부족한 점이 확인됨과 동시에, 교육 정책 변화로 표방하던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등 디지털 기기 부문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46] 북한은 아동권리협약(CRC) 제5차 보고서에서, 2008년부터 전 소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컴퓨터 및 외국어 교육이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47] 겨울철 화목 비용을 학생들에게 재촉하여 학교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10월 초면 겨울나기 화목을 마련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화목대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지방인민위원회나 공장 기업소들이 교육기관의 화목을 해결해주었지만, 이러한 관행은 오히려 사라졌다고 한다. 이채은 기자, '무단 결석하는 北 학생들 늘어나...화목대 부담에 등교 거부, 2022년 12월 5일자,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21205-4/

[그림4] 시급히 필요한 자재 및 물품



학교에서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 노트북 등은 실질적으로 접근성에 있어 차이가 나고 있었다.[48] 해당 기기를 마련한 방법[4-4]으로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들만 집에서 사용(47.5%)하고, 국가의 일부 지역의 특수학교에서만 지원되고 있다(23.7%), 그 외 학부모들이 (학교에) 제공하였다(20.3%)라고 나타나, 학습 기회의 불균형과 학부모에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이러한 IT 기기 부족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 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개선한 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제5차 보고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평안남도의 시골 학교 1곳을 리모델링하고 재정비하여 다른 시골지역 학교들이 참고할 모범학교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DailyNK 기사에 따르면 평양시와 황해남도 해주시 소학교들이 컴퓨터 보유 대수가무려 63%에 달하고, 함경남도 고원군과 강원도 고산군은 6%로 나타나 기설 현대화 차이는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49]

[48] 2020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원격교육법'을 채택하였고, 김정은은 2021년 12월 말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비상방역 대책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원격교육 강화를 지시했다.

[49] 정태주 기자, "소학교 정보기술 수업 중요하다면서 설비는 자력갱생 하라?", 2022년 12월 19일자, https://www.dailynk.com/20221219-4/

취약 계층인 학생들의 학습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경우 지원이 있는가[4-5]에 대한 질문에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서 국가차원의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47.1%)이며, 아울러 일부 학생들이 수업을 결석하여 제대로 학습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학부모 의견(33.3%)이 주를 이뤘다. 학교에서 지원한다는 응답은 단 7.8%(4명)에 그쳤다. 계층 간의 편차를 보완하고 최소한의 학습 의지를 유지하게 만드는 국가차원의 조치가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3 학부모 비용 전가 항목

이러한 가운데,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일상적인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3년 이내 1) 학교 시설 보수비, 2) 노트북, 실험도구 3) 교원 지원 4) 난방 5) 토끼 가죽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가 부담한 내역을 간단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통상 고등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둔 부모의 경우 학교 시설 보수비에만 연 평균 조선 돈 20만원을 바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연소득이 80만원에 그치는 최저 소득을 가진 가정(평남1)마저 돈 3만원씩 1년에 12회를 바치고 있었다. 학교가 요구하는 최소 기준이 가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책정 및 상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 형편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정의 월 소득이 1,000,000원~2,000,000원에 해당하여 풍족할 경우, 한 달에 학교시설 보수비로 돈 15만원 1년 4회, 담배 5보루 1년 1회, 모래, 자갈, 철근 1년 1회(평양3, 평양5)를 부담하는 반면, 월소득 1,000,000원 이하의 어려운 형편일 경우 평균 돈 5만원 1년 7회, 담배 1보루 2회, 시멘트 100kg 1년 1회, 판자, 각자 1개씩 1년 4회(평양 1,2,4,6)[50]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편에 따라 약 2배의 격차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도 따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상 담배 1보루나, 술 10리터 등 기호식품과 쌀 15kg 1년에 2회 혹은 돈으로 10만원 1년 1회, 1만원 1년 4회 등이 부담되고 있었다. 교원에 의한 차별적 대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한편, 학교 난방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통상 땔감 장작 1단을 1년에 3회 부담하거나, 구멍탄 20장을 1년에 1회씩 부담하고 있었다. 기초적 여건의

[50]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거두는 학교시설보수비, 노트북, 실험도구, 교원에 대한 지원, 난방, 토끼가죽 등의 현물지원 외에도 학부모가 노력 동원에 나서는 경우를 포함하면 자녀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데 과중한 부담이 지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악함에도 교육 정책 변화에 따라 노트북, 실험도구가 학부모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었는데, 각 지역의 초등중학교와 고등중학교 학부모들이 제공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7] 최근 3년 내 노트북, 실험도구를 위해 학부모가 제공한 학교 운영비 (질문 4-6)

지역	초등중학교	지역	고등중학교
함남1	0회	함남3	0회
		함남4	0회
		함남6	0회
자강	표본없음	자강3	돈 10만원 1년1회
강원	표본없음	강원2	돈 1만원 1년 2회
		강원3	돈 3만원 현대화비 1년 2회
평양1	0회	평양3	돈 30만원 1년 1회
평양4	돈 20만원 1년 1회	평양7	0회
황남4	돈 20만원 1년 1회	황남1	돈 8만원 1년 1회
황북2	돈 10만원 1년 1회	황북1	돈 5만원 1년 2회
황북3	돈 5만원 1년 2회		
함북3	돈 13만원 1년 1회	함북2	돈 13만원 1년 1회
평북1	돈 13만원 1년 1회	평북3	돈 10만원 1년 1회
평북5	돈 13만원 1년 1회		
평북6	돈 11만원 1년 1회		
양강	표본없음	양강2	돈 15만원 1년 1회
평남4	돈 5만원 1년 2회	평남1	돈 10만원 1년 8회
		평남3	돈 6만원 1년 3회
		평남7	돈 10만원 1년 1회
		평남8	돈 5만원 1년 2회

기초적인 교육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 정책을 펼치고, 그 부담을 학부모에게 가중시키는 점에 대한 비판 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지점이다.

2.3.4 학생 노력 동원 실태

학생들이 '노력 동원'[4-7]에서 주로 하는 작업은 건설 현장, 농촌 지원(30.8%), 축산, 양묘장 관리(23.8%) 순이다.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작업은 비교적 간단하고 난방에 필요한 작업인 땔감, 도토리 줍기(16.2%)와 단순 미화 및 마을 정비 사업 등에 동원(4.6%)되는 수준이 아닌 강도 높은 노동 부과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 동원은 교과과정 내에서 진행되는데, DailyNK 기사에 따르면 개천시가 2023년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모내기 총동원 기간으로 선포하고, 학생들은 20일부터 31일까지 무려 11일간

학업을 중단하고 모내기 동원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수업이 끝나는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20일 이후에는 학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로 모내기에 동원되었다. [51] 이는 명백히 학습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표8] 최근3년 이내 학생의 '노력동원'

구분	빈도	비율(%)
1.땔감 줍기	21	16.2
2.건설현장, 농촌지원	40	30.8
3.양묘장, 축산	31	23.8
4.단순 미화, 마을 정비	6	4.6
5.부모 비용으로 제외	29	22.3
6.기타	3	2.3

그런데, 이중 일부 학생은 부모의 비용으로 동원에서 제외(22.3%)된다고 밝히며, 학교 공여 부담액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기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하루 한끼도 먹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 동원에 동원되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사상 비판까지도 가한다고 한다.

[표9]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이유 (질문 2-5)

구분	빈도수	비율(%)
1.토대의 한계	19	15.4
2.교육 내용 불만족	14	11.4
3.노력동원 및 과제부담	41	33.3
4.학교생활 낮은 흥미	30	24.4
5.생계 유지	18	14.6
6.기타	1	0.8

이 결과 학생들 스스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주요 요인[2-5]은 강제노력동원으로 인한 피로감(33.3%)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서 흥미도가 떨어지기 때문(24.4%)이라는 의견이 높은

[51] 이채은 기자, '모내기 전투'에 또 교육권 침해한 북한… "11일간 수업 중단", 2023년 6월 7일자, https://www.dailynk.com/20230607-3/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강제동원 뿐만 아니라, 청년동맹이나 소조활동, 정치사상 교육의 비중 등 북한 교육 특수성으로 인한 피로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특히, 강제노력동원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국가의 경제난과 연결되어 근본적인 개선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무상교육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불만 제기는 충분히 전달[4-8]되고 있을까. 대다수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44%), 전혀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26%)고 밝혔다. 충분히 전달되는 경우라도, 비용 부족으로 인한 문제(14%)가 상존하며, 충분히 전달된다는 의견은 단 2명에 그쳤다.

2.4 교육 접근권 보완 방식에 관한 질문

2.4.1 미취학 학생의 입학 준비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학생들의 경우 소학교 입학을 준비[5-1]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고 있으며,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교육을 받거나(40%),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28.2%) 교육 접근권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듯 보이지만, 유치원 시기부터 가정 형편에 따라 가정교사를 두는 경우(22.7%)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취학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들이 초등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교육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소학교 입학 전 교육이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이 단 1명 뿐인 것을 보아 선행 학습의 중요성이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4.2 성적과 과외 교습 비용 충당

희망하는 각 교육 기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5-4]한가.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뛰어난 성적(54%)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뇌물(경제력)(18%), 집안 배경 및 힘(16%), 출신 성분 및 토대(8%)로 나타났다.

집안 배경 및 힘이나 출신 성분 및 토대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학부모의 성분 토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적이 좋은 교육기관 진학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점은 북한의 기회가 균등한 것으로 해석되도록 만든다.

그러나 뛰어난 성적을 얻기 위해 '과외 교습'이 얼마나 횡행하는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5-5] 모든 지역에서 과외는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높은 빈도의 과외 과목은 영어로 나타났다. 중국어를 포함하여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통상 외국어 과외를 받는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26명에 달했다. 다음으로 수학이 23명, 물리, 화학이 11명, 컴퓨터가 10명이었다. 해당 과외에 충당되는 비용이 상당함에도 여러 개의 과목을 복수로 받는 경우도 나타났다. 평남 지역의 경우 고등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수학, 물리, 화학 과목 중 학생의 필요에 따라 과외를 진행하며, 매월 중국돈 800~1500위안을 지급하고 있었다. 초급중학교 학생들은 경우 매월 중국돈 500위안을 지출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춤이나 손풍금(매월 25달러, 매월 쌀 15kg), 피아노(매월 15달러), 성악(매월 15달러), 노래(매월 8.5달러), 바이올린(매월 30달러), 기타(조선돈 15만원), 축구(쌀 10kg)를 별도의 과외 교습을 통해 배우는 학생들도 있었다. 저학년일 경우 어릴수록 과외비가 올라간다고 한다.

평양 지역의 과외 수준은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학교 교과 과정 및 소조활동을 통해 충분히 충족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입시 과목보다 오히려 예체능 계열의 과목(기타, 바이올린, 축구, 성악 등)을 별도로 교습 받는 것이다. 영어, 수학 교과목은 한 과목당 25달러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타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 지역별로 교원을 포함한 학교 교육 수준이 다르고, 국가 차원으로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지역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3 고등교육으로의 진학 기회 획득

고등교육으로의 진학[5-6]은 한 반의 학급 인원 평균 26.5명 중 남성이 2.56명, 여성이 2.34명이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여성과 남성의 숫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남성의 비중이 조금 높다. 남성은 대부분 군 입대를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대학 진학 숫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진학은 북한 사회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니며, 간부급으로의 승진은 물론, 좋은 직장 자체가 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임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보다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4.4 지역 및 도농 간 격차 극복

대학 진학률에도 지역 간 차이가 있다[5-7]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학부모들은 농촌 지역의 교원과 도시 지역의 교원 간에 자격과 교육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36.1%) 농장원 집안에서 대학에 입학하려는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35.2%),

상대적으로 학생의 대학 진학에 대한 의지가 더 높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 입학이라는 기회는 분명 가치가 높고, 국가 정책 상으로도 이러한 고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농 간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남는다. 뿐만 아니라, 도농 간 격차보다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고(12.3%), 가정 형편 및 뇌물로 인한 기회의 차이(15.6%)가 벌어지는 사회적 추세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학부모도 존재했다.

2.5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2.5.1 궁극적 원인에 관한 고찰

자신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기 힘든 궁극적인 이유[5-8]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우선적으로는 성적(49.3%)으로 인해 원하는 대학에 가기 힘들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선호하는 중등교육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우선순위가 '성적'이라는 응답과 일치한다. 다음으로는 뇌물을 제공할 형편이 되지 못해 대학에 가기 힘들다는 것이다.(22.5%) 다음으로 토대문제(15.5%)로 인한 한계라는 답변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가정교사를 둘 형편(9.9%)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차지하였다.

뇌물 공여의 경우 이로 인한 교원 및 부정 입학을 우려[5-9]할 수 있는데, 부정입학을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34.4%)보다 부족한 교육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35.4%)이 다소 높았다. 나아가, 뇌물로 인한 부정입학이 있는 것이 상관없다는 의견(13.5%)도 상당함을 보여줌으로써, 뇌물 공여에 대한 느슨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복수응답이 가능함에도 부정입학은 없다는 의견에 단 1명이 동의함으로써 만연한 실태를 잘 보여준다. 일부의 학부모들은 성분이 좋지 않아도 뇌물로 인해 입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12.5%)고 답변하여, 성분에 대한 뇌물의 영향력 혹은 나아가 북한식 '순기능'을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5.2 교육에 회에 대한 인식

궁극적으로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교육' 목표는 무엇이며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고급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은 것[6-1]에 대해 학부모들은 자녀가 간부가 되기에 필수 과정(33.3%)임과 동시에 다음으로 사상교육을 완수하였다는 증명이 된다(15.8%)고 인식하여 북한 사회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보편적인 의무 교육의 기대치인 사람으로써 필요한 세계관이 넓어지고 필요한 지식을 갖추게 된다(28.1%)고 기대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직장을 얻기 위한 과정(14%)이라는 인식과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8.8%)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학부모는 비교적 적은 것을 고려할 때, 진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의 실효성 측면에서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최근 탐구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강조하고 중등학교에서 직업기술교육을 새롭게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6-4]는 기관의 간부 및 주요 요직에 가기 위해서 중요하다(40.4%)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하다(31.6%)에 큰 비중이 나타났다. 의무교육의 역할과 대학 입학의 가치상에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를 선택한 학부모는 15.8%에 머물렀다.

의무 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학교로부터의 이탈율을 방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단계이다.[6-2] 긴요한 지원 대상으로 신분에 상관없이 수재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을 선택한 비중(40%)이 높은 것은 북한 교육 상 '성적'이 가장 공평하고 평등한 기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난한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25.5%),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27.3%) 지원할 것을 선택하면서 의무 교육 본연의 취지에 맞는 긴급한 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5.3 교육 접근권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당 국가 차원에서 교육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해[6-3] 어떠한 노력을 펼쳤는지에 관한 질문에 성적이 낮거나 떨어지면 더 많이 교육한다(37%)와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편한 것(18.5%)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여학생 남학생 차별 없이 대한다(16.7%),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한다(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자녀의 앞날을 위해 대학 입학 과정에서 불공평이 없어야 한다는 의식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불공평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기준으로 대학을 가야 하는가[6-5]에 대한 질문에 50명 중 47명이 학교 성적을 선택하여, 재력이나 토대의 영향력에 대해 경각심을 충분히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6-6]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도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여성은 생계 활동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32%) 거나, 북한 사회에서 주로 가정 살림이나 아이를 키우는 일을 맡아야 한다.(23.7%)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이 좋은 직업을 더 가지도록 남학생이 대학에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20.6%)도 상당했다. 여성과 남성 간의 차별적 대우와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 계층이 교육을 충분히 받는 것에 대한 의견[6-7]은 어려운 계층은 적극적으로 돕고 장학금 등

교육을 시켜야 한다(52.8%)와 어차피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를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28.3%)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북한 내부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통상 북한의 학생들은 미래 직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6-8]에 대해 출신성분이 좋으면 대학에 입학하여 간부가 되고자 하며(45.1%), 대부분 군입대를 하여 당원이 되고자 한다(30.4%), 출신성분에 따라 원하지 않는 곳에 배치된다(21.6%) 순으로 나타났다.

결정적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간부가 되는 삶과 원치 않는 곳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는 낮은 출신 성분을 가진 학생의 미래는 교육과 밀접히 연결됨에도 이를 연결지어 생각하고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출신 성분을 어떻게 확인하는 가[6-9]를 살펴보면,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할 때(32.8%), 소학교, 고등중학교에 우수한 인재 선발에 제외되면서(16.4%), 군 배치 당시에 입대가 좌절되며(19.7%), 대학입학이 어려운 상황에서(14.8%), 혹은 사회진출 이후에(14.8%) 뒤늦게 이를 인지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토대에 의해 직업(직장)이 정해지는 것[6-10]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48%), 올바르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38%)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불공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 무력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책을 찾는 동기를 북돋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론 및 제언

교육은 빈곤에서 벗어나고, 불평등을 줄여주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게 하는 인간의 기본권리이다. 또한 교육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초적 요소이기도 하다.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법은 평등한 교육 접근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역, 성분, 경제력, 성별에 따른 구조적 차별의 장벽은 북한의 법과 교육 현실의 간극을 만든다. 코로나로 가중된 사회적 위기 속에 의무 교육으로부터 이탈한 빈민 가정 아이들의 교육권 박탈 상황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교원 또한 당국으로부터 학생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 이상의 부담을 지고 있다. 강제 노동과 착취의 수준도 개선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은 사회·문화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북한 사회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북한 사회 내부의 맥락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북한의 법과 정책내에서 교육접근 기회의 차별을 줄이고 기회균등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교육권을 개선하고, 나아가 북한인권전반의 증진을 가져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북한당국에 대한 권고와, 국제사회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북한 당국에 대한 권고

- **교육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교육 실태 파악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

북한이 제출한 아동권리협약(CR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기존 아동 관련 데이터 수집 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학교 취학 및 등록률, 학교와 교육 기관 수 등 관련된 지표 파악, 특히 출결 상황을 비롯하여 학습권 침해 여부, 과도한 노력 동원, 뇌물 공여, 교원으로부터의 심각한 차별 피해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응당 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제사회와 공유, 엄격한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 **지역적 차별 및 성분제에서 벗어난 진로의 기회 제공**

지역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지방 농촌지역 중학교 졸업생 대상, 중앙대학 입학할당제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인구분포 비례에 맞게 그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점진적 도입의 방식은 중학교 졸업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입학할당제 도입의 선전 효과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입학할당제를 통해 중앙대학에 입학한 지역 출신자들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직장배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지역 출신 졸업생들의 직장배치에 있어서 지역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은 성분 또는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방안이며, 따라서 거주 이전의 자유 실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학교 교육과 진로 설정에 있어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철폐**

일부 전공부문에 국한하여 여학생의 진로를 설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모든 전공부문에 대한 여학생 진학률을 남학생과 동일하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비단 고등교육으로의 진학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에 대한 다양한 기회 제공에 있어서도 여학생에 대한 장벽을 없애야 한다.

여성 대학졸업생들에게 당, 행정, 기관과 기업소의 간부 등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부사업 원칙을 수정해야 한다. 제대군인, 당원, 대졸자 등 기존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 현재 원칙을 개정해, 능력있는 여성을 간부로 등용한 후 정기적으로 업무 실적을 평가해서 입당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는 유니세프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 교사 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교사들 대상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유니세프의 협력은 교육자료 및 지도 방법 등의 공유가 될 것이다. 교사들부터 성평등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함으로써 교육 및 학생 관리에서 성평등을 생활화할 수 있다. 교사 대상 성인지 교육이 실시 된 다음 해부터 초급중학교 학생들 대상 성교육 함께 성평등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와 학생들 대상 성인지 교육은 북한 사회 내 전반적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 **교육 현장에서의 북한 당국의 재정적 책임 강화**

지역 기관, 후원 단체, 학부모 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 바치는 전체 재정부담을 살피고, 이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당국이 책임지고 있는지 보고해야 하며, 당국의 재정 부담 비중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외부담방지법의 현실화를 위하여, 시, 군 인민위원회가 정한 후원단체와 기관의 교육자재 후원을 정례화해야 한다. 후원 정례화 항목은 단기적으로 첫째, 겨울철 학교 내 난방을 위한 화목 제공을 즉각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학생들의 화목 제출 부담을 없애야 한다. 둘째,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학교꾸리기'에 사용될 페인트와 석회 제공을 지역 후원단체의 제공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

중앙의 교육재정에서 교사 인건비를 관리함으로써 현재 시장물가에 비례해 인상해야 한다. 인건비 인상은 교사 1인 식량 비용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하루 600g 분량의 쌀과 부식물 비용을 한달 월급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우선 도입하길 권고한다. 이를 통해 교사가 학부모 뇌물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관행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학습 기기 및 도구 제공 확대**

농촌·군단위 중학교에 교양도서 전용 판형 컴퓨터 구비를 제안한다. 대략 25-30달러 정도 가격인 판형 컴퓨터를 독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소외된 학교부터 공급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유엔의 교육, 문화 부문의 기관인 유네스코의 협력을 받아 건강, 성교육 및 위생문제 관련 서적까지 포함시키면 국제사회와 협력사업의 모델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 **강제 노동의 점진적 축소 및 폐지**

농번기 한달간 합숙 농촌동원(학생 농촌지원 전투)은 3년 계획 기간을 정해 점진적 방식으로 폐지해야 한다. 고급중학교 내에서 농촌동원 학년을 1년에 한 학년씩 올려서 3년 내 중학교 학생의 농촌 동원을 전면 없애도록 한다. 줄어드는 협동농장 지원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농업기계화를 추진한다. 다만, 농기계를 지원받는 협동농장은 아동노동력 동원의 전면 폐지 여부를 국제기구의 모니터링으로 점검 받을 것을 전제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역할

- **교사 역량 강화 사업 지원**

유니세프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가 지방 학교의 교사역량 강화 교육 방안에 대해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와 협조해 논의를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특히 지방과 농촌 지역 교사들의 영어, 과학 등 필수 전공과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의 협력이 필요하다. 교사 대상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충분히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 교육의 정기성을 보장하는데도 비대면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다.

- **지방 학생들을 위한 정기적 영어 수업 지원**

영국, 독일 등의 외교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대학 간의 협력사업을 도모해 북한의 지방 사범대학교 학생들 대상 비대면 영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지방 사범대학 학생들의 비대면 영어교육은 북한의 지방 인재 양성과 교육 활성화에 실질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 **협동농장의 아동 노력동원의 점진적 축소와 궁극적 폐지를 위한 협력**

북한의 협동농장에 아동 노력동원을 점진적으로 축소 그리고 장기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개발국가의 농업 기계화 실현을 돕는 프로젝트로 AFP (Agriculture Food Program)의 협력을 북한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강제노동 전면 폐지와 식량권 확보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관련 국제기구와 유엔 안보리 제재 위원회가 북한 농업기계화 전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정책을 도입 실행하는 협동농장에 한해 농번기에 정기적인 모니터링를 실시하고 중학교 학생들 대상 '농촌지원전투'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원회 (CRC) 또는 사회권 위원회 (ICESCR)의 모니터링**

북한의 도, 시, 군 당교육부 및 해당 인민위원회 교육과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 실시를 제안한다. 2017년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의 평양 방문과 유사한 형식이면 될 것이다. 즉 북한이 가입비준한 CRC 또는 ICESCR의 전문 위원 대표단이 농촌지역 중학교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북한당국이 지향하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으로 발돋움하는데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참조 문헌

단행본

김지수,『김정은 시대 북한 유 · 초 · 중등 교육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 RR 2019-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5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쟁점목록 답변.

UN Human Rights Council, Commission of Inquiry(COI),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5th session, A/HRC/25/CRP.1, February 7, 2014.

논문

김병연, 김지수,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조건과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 2019,『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1호, pp.175-205

김석향, 김경미,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pp.105-134.

김지수, "제7차로동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통일교육연구』, 2017, 제14권 제2호, pp.1-21.

전일구, "북한 학교의 방과후활동 연구 : 김정은 집권 이후 교육신문(2012-17년)에 나타난 과외 · 소조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2018, 10집 2호, pp.241-288.

전재황,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세계헌법연구』, 2014, 제20권 2호, pp.21-60.

조현정, "북한 교육에서 사교육 활용의 양상과 그 의미", 교육과학연구, 2022, 제53권 제4호, pp.101-130.

신문기사

살몬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살몬 보고관 첫 보고서 유엔 제출…"중러, 탈북민에 '강제송환금지 원칙' 적용해야", 2022년 10월 15일자, VOA, https://www.voakorea.com/a/6790547.html

이채은 기자, '무단 결석하는 北 학생들 늘어나…화목대 부담에 등교 거부, 2022년 12월 5일자,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21205-4/

이채은기자, '새 학년 시작됐지만 학생 출석률 저조… "가정형편 어려워서…"', 2022년 4월 7일자,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20407-1/

이채은 기자, '모내기 전투'에 또 교육권 침해한 북한… "11일간 수업 중단", 2023년 6월 7일자, https://www.dailynk.com/20230607-3/

이채은 기자, '어린 나이에 집안 가장된 청진시 10대 소년, 손수레 끌어서…', 2023년 9월 18일자,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30918-2/

이채은 기자, '당 창건일 꽃바구니 비용, 소학교 학급 내 '이들'에게만 거뒀다', 2023년 10월 11일자,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31011-1/

정태주 기자, "소학교 정보기술 수업 중요하다면서 설비는 자력갱생 하라?", 2022년 12월 19일자, https://www.dailynk.com/20221219-4/

표

[표1] 의무교육 기간 확대에 대한 의견 (질문 2-1)
[표2] 코로나 위기 하 출석률 (질문 2-8)
[표3]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 (질문 3-1)
[표4] 콤퓨터, 과학기술, 외국어교육에 대한 평가 (질문 3-4)
[표5] 교육 수준에 대한 평가 (질문 3-5)
[표6] 학교 운영의 재정적 책임 기관 (질문 4-1)
[표7] 최근 3년 내 노트북, 실험도구를 위해 학부모가 제공한 학교 운영비 (질문 4-6)
[표8] 최근 3년 내 학생의 '노력동원' (질문 4-7)
[표9]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이유 (질문 2-5)

그림

[그림1] 조사대상자 지역 분포
[그림2] 조사대상자 성별 분포
[그림3] 조사대상자 직업 분포
[그림4] 시급히 필요한 자재 및 물품

조선 인민의 교육 접근성에 대한 설문조사

ID			

먼저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선 인민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에 대한 귀하의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여러분께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인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조사에 참여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1부: 기본 질문

1-1. 본인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1-2. 본인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년도

1-3. 살고 있는 지역은 어느 곳(도) 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자강도 (2) 함경북도 (3) 함경남도 (4) 황해북도 (5) 황해남도
(6) 양강도 (7) 강원도 (8) 평안북도 (9) 평안남도 (10) 평양시

1-4.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장사/밀수무역 (2) 무역/외화벌이 (3) 보건의료(의사, 약사 등)
(4) 교원/연구사(인민학교, 중학교, 대학 등) (5) 행정조직원(행정지도원, 외교관 등)
(6) 당기관원 (7) 보안원/군인 (8) 노동자 (9) 농업/어업/임업
(10) 부양(주부) (11) 학생 (12) 무직자 (13) 문화예술인
(14) 퇴직자 (15) 기타 :_____

1-5. 당신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 무학 (2) 소학교 중퇴 (3) 소학교 졸업 (4) 초급중학교 졸업
(5) 고급중학교 졸업 (6) 단과대학, 고등전문대학 졸업 (7) 대학 중퇴
(8) 대학 졸업 (9) 박사원, 연구원 중퇴-졸업
(10) 기타 _____

1-6. 본인의 월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조선돈)

(1) 300,000원 미만 (2) 300,000~500,000원 (3) 500,000원~1,000,000원
(4) 1,000,000원~2,000,000 원 (5) 2,000,000원 이상
(6) 기타 _____

1-6-2. 혹은 년 소득을 적어주세요. _____ (조선돈)

1-7. 귀하의 자녀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한 명을 택해주세요.
(1) 남성 (2) 여성

1-8. 자녀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 년도

1-9.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어느 곳(도)에 있습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자강도 (2) 함경북도 (3) 함경남도 (4) 황해북도 (5) 황해남도
(6) 양강도 (7) 강원도 (8) 평안북도 (9) 평안남도 (10) 평양시

1-10.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아래에서 고르세요.

(1) 소학교 재학
(2) 초급중학교 재학
(3) 고급중학교 재학
(4) 단과대학, 고등전문대학 재학

(5) 대학 재학

(6) 기타 _____

2부: 의무 교육 전반적인 질문

2013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 발표로 인해 의무교육 기간이 11년에서 12년으로 확대되고, 교과목 시수가 바뀌는 등 교육 정책이 개편되었습니다. 위 정책에 따르면 고급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과정입니다.

2-1. 의무 교육 기간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좋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주세요)

2) 나쁘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주세요)

2-2. 평소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꼭 학교에 보내야 한다. (2-3으로 가시오)
2) 보내는 것이 좋다. (2-3으로 가시오)
3) 꼭 보낼 필요는 없다. (2-4으로 가시오)
4) 전혀 보낼 필요가 없다. (2-4으로 가시오)

2-3. 학생을 학교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1) 학교 교육이 좋은 성적과 대학 입학에 도움된다.
2) 좋은 사회적 지위(성분)를 가지는데 중요하다.
3) 남학생이라면 학교 교육은 필수이다.
4) 좋은 직장을 갖고 더 잘 살 수 있다.
5) 학생의 인성과 가치관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6) 기타 (적어주세요)

2-4. 학교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1) 학교보다 방과 후 소조 활동이나 과외 활동이 대학 입학에 도움된다.
2) 성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3) 여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
4)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학교 교육이 학생의 인성과 가치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기타 (적어주세요)

2-5.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1) 토대로 인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2) 학교 교육 내용에 불만족하기 때문이다.
3) 수업 이외에 노력 동원과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4) 친구 관계 등 학교생활에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5)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6) 기타 (적어주세요)

2-6. 출석을 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합니까?

1) 출석은 졸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최소 일자만 채운다면 가능하다. (어느 정도 기간?)
3) 특수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다. (어떤 이유입니까?_)
4) 대체로 불가능하다.
5) 절대로 불가능하다.

2-7. 학생이 결석할 경우, 국가 및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1) 생활총화 및 처벌을 통해 의무교육을 받도록 한다.
2) 선생님 및 학급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출석하도록 만든다.
3) 등교해야 하는 최소 일자만 출석하면 놔둔다.
4) 잘 사는 경우 뇌물을 제공하면 놔둔다.
5) 아무런 조치가 없다.

2-8. 코로나 비루스 상황 하에서 학생들의 출석률은 어떠합니까?

1) 전체 인원의 100% 가까이 출석한다.
2) 80% 이상 출석한다.
3) 50% 이상 출석한다.
4) 30% 이상 출석한다.
5) 거의 출석하지 않는다.

2-9. 코로나 비루스 전후 출석률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크게 변화가 없다.
2) 거리두기로 인해 몸이 좋지 않을 때 학교를 많이 결석한다.
3)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의 결석이 많다.
4) 학교에서 빠지는 학생들을 관리하여 더 많은 학생이 출석한다.
5) 정치사상교육이 확대되어 단속으로 더 많은 학생이 출석한다.

3부: 교육 내용에 관한 질문

3-1.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골라 번호를 적어 주세요.

1)
2)
3)
① 국어 (문학) ② 영어 ③ 수학 ④ 자연과학 (물리, 화학, 생물)
⑤ 사회주의 도덕 ⑥ 미술 ⑦ 체육 ⑧ 기초기술
⑨ 음악 ⑩ 역사 ⑪ 조선 지리 ⑫ 혁명력사교육
⑬ 콤퓨터 ⑭ 기타 (적어주세요)

3-2. 위 교과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우리 자녀의 지식과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2) 자녀의 학교 생활 평가(평정서)에 도움이 되어서

3) 자녀의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어서

4)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어서

5) 자녀가 순수하게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3. 최근 일주일 이내 학교에서 진행된 하루 일과를 안다면 간단히 적어주세요.

	교과목 명을 적어주세요.	노력 동원 (O)	소년단활동, 청년동맹 활동 (O)
1 수업			
2 수업			
3 수업			
4 수업			
5 수업			
6 수업			
과외 소조 활동1			
과외 소조 활동2			

3-4. 교육 개편으로 콤퓨터, 과학기술, 외국어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콤퓨터교육 ① 좋은 교육이다. ② 불필요한 교육이다.

2) 과학기술교육 ① 좋은 교육이다. ② 불필요한 교육이다.

3) 외국어교육 ① 좋은 교육이다. ② 불필요한 교육이다.

3-5. 학교에서는 위 교과목을 충분히 잘 교육하고 있습니까?

1) 수업 준비는 잘 되지 못하고 있다.

2) 선생님에 따라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준비한다.

3) 지역의 학교에 따라 선생님의 수준이 다르다.
4) 국가에서 선생님을 전부 교육해서 수업 준비를 시키고 있다.
5) 관심이 없어 잘 모르겠다.

3-6. 콤퓨터를 잘 다루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1) 일반 학생 모두 잘 다룬다.
2) 특수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수재들이 잘 다룬다.
3) 학교에서 집중 교육을 시킨 아이들이 잘 다룬다.
4) 가정 교사나 가정 내 콤퓨터를 가지고 학습한 학생들이 잘 다룬다.

3-7. 수업 중 정치사상교육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좋은 교육이다. (3-9.으로 가세요)
2) 불필요한 교육이다. (3-8.으로 가세요)

3-8.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없다.
2)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잘 되지 않고 있다.
3) 콤퓨터, 외국어 등 실리적인 교과목의 확대가 중요하다.
4) 대학 입학을 위한 기초 교과목 비중이 확대되어야 한다.
5)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갖춰야 할 훌륭한 가치, 덕목을 교육해야 한다.

3-9. 학교에 따라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1) 아이의 학교를 바꾸어 새로운 교과과정을 따라가도록 한다.
2) 아이에게 별도의 과외 활동을 시켜 교과과정을 따라가도록 한다.
3) 성분에 따라 학교를 변경하기 어려워 포기한다.
4) 비용이 없어 포기한다.
5) 국가 및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여 고치도록 한다.

4부: 무상 교육에 대한 평가

4-1. 학교 운영의 재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 군 도당위원회
2) 교육부
3) 학교
4) 청년동맹
5) 학부모
6) 어떤 기관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4-2.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어느 정도 비용을 요구합니까?

1) 내라는 것은 전혀 없다.
2) 가정형편에 따라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부담한다.
3) 최근 코로나 비루스로 인해 어려워져 일부 비용을 내었다.
4) 학교에서 수시로 걷는다.

4-3. 현재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 교과서, 참고서 등 학습에 필요한 자료
2) 책상, 걸상, 칠판, 교편물 등 기본적인 자재
3) 체육기자재, 음악기재 등 예술 계열의 자재
4) 콤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등 디지털 기기 공급
5) 겨울 난방에 필요한 땔감과 식수 공급

4-4. 교과목 개편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콤퓨터 및 노트북을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1) 국가에서 전 지역의 학교에 고르게 지원하였다. (학교에 대)
2) 국가에서 일부 지역의 특수학교에만 지원하였다.
3) 학교가 마련하였다. (학교에 대)
4) 학부모들이 제공하였다.

5)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들만 집에서 사용한다.

4-5.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경우, 지원이 있습니까?

1)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있다.
2) 학교에서 지원한다.
3) 동료 학생 및 이웃이 돕는다.
4) 일부 학생은 수업을 결석하여 제대로 들을 수 없다.
5)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지원이 어렵다.

4-6.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학교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최근 3년 내에 무엇을, 얼마나, 자주 제공하였는지 적어 주세요.

	무엇을, 얼마나	횟수 (일 년)	기타 (노력 동원, 사람 고용 등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 학교 시설 보수비	돈 원 쌀 kg 담배_보루 시멘트 기타	회	
2) 노트북, 실험 도구	돈 원 기타	회	
3) 교원 지원	돈 원 쌀 kg 담배_보루 기타	회	
4) 난방	땔감	회	

5) 토끼가죽	장	회	

4-7.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학생의 '노력 동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1) 겨울이면 난방을 위해 학생들이 산에 가서 직접 땔감, 도토리 줍기 등을 한다.
2) 학생들이 건설 현장, 농촌 지원을 나간다.
3) 학생들이 양묘장, 축산 등 학교 과업을 위해 동원된다.
4) 학생들이 단순한 미화, 마을 정비사업 등 간단한 작업에만 동원된다.
5) 부모가 비용을 낸 학생들의 경우 노력 동원에서 제외된다.

4-8. 학교 운영에 관해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이 있다면,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1) 중앙에서 논의되어 내려온다.
2) 충분히 전달되어 잘 반영되고 있다.
3) 충분히 전달되지만, 비용이 부족하여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4) 전혀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5) 전반적으로 어떻게 논의되는지 알 수 없다.

5부: 교육 접근권에 관한 질문

5-1. 만6세 미만 미취학 학생들은 소학교 입학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1) 모두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교육 받는다.
3) 가정 형편에 따라 가정교사를 둔다.
4) 대부분 소학교 입학 전 준비를 하지 못한다.
5) 소학교 입학 전 교육은 전혀 필요 없다.

5-2. 학생들은 보통 학교를 언제까지 다닙니까?

1) 유치원까지 다닌다.
2) 소학교까지 다닌다.

3) 초급중학교까지 다닌다.

4) 고급중학교까지 다닌다.

5) 대학교까지 다닌다.

5-3. 자녀가 가길 희망하는 교육 기관이 있다면 선택해 주세요. (여러 개 선택 가능)

1) 금성학원

2) 평양외국어학원

3) 각 시도 외국어 학원

4) 제1고등중학교

5) 기술고등중학교

6) 일반중학교

5-4. 희망하는 각 교육 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주세요.

1)

2)

3)

① 뛰어난 성적 ② 출신 성분 및 토대 ③ 뇌물(경제력) ④ 입학에 관한 정보 ⑤ 집안 배경 및 힘 ⑥ 기타 (적어주세요)

5-5. 보통 가정교사에게 수업 받는 교과목과 매월 제공해야 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교과목 명 (전부 적어주세요)

2) 비용 : 쌀 / 중국 돈 / 기타

5-6. 통상 한 학급에 남녀 학생의 대학 입학 비율이 어떻습니까?

1) 전체 학급의 학생 수 명 중

2) 남학생__명, 여학생 __ 명

5-7. 도시 농촌 간 대학 입학자 수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1) 농촌 지역의 교원의 자격과 교육 수준이 낮다.
2) 농장원 집안에서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 수가 적다.
3) 오히려 국가 혜택으로 농촌 지역에서 더욱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다.
4) 도시 농촌의 차이보다, 가정 형편 및 뇌물이 중요하다.
5) 도시 농촌의 차이보다, 지역별 차이가 더 크다.
5-8.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성적이 좋지 않아 원하는 대학 입학이 힘들다.
2) 토대가 좋지 않아 원하는 대학 입학이 힘들다.
3) 가정 교사를 둘 형편이 못되어 대학 입학을 준비할 수 없었다.
4) 뇌물을 제공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5) 여학생이기 때문이다.

5-9. 교원 및 부정 입학이 만연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1) 부정 입학을 단속해야 한다.
2) 부족한 교육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3) 성분이 좋지 않아도 뇌물로 인해 입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4) 뇌물로 인해 부정입학이 있는 것이 상관없다.
5) 실제로 부정 입학이나 뇌물이 심각하지 않다.
6) 기타 (적어주세요)

6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6-1. 고급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시오.

1) 사상교육을 완수했다는 증명이 된다.
2) 간부가 되기에 필수적이다.
3) 직장을 얻기 위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에서 일을 잘 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힌 것이다.
5) 사람으로서 세계관이 넓어지고 필요한 지식을 갖추게 된다.

6-2.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서 다음 중 누구에게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 신분에 상관없이 수재 중심으로
2)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진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3) 여성을 중심으로
4) 가난한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5)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6-3. 당 국가 차원에서 교육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1)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편하였다.
2)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한다.
3) 여학생, 남학생 차별 없이 대한다.
4) 성적이 낮거나 떨어지면 더 많이 교육한다.
5) 불공평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

6-4.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기본적으로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하다.
3) 기관의 간부 및 주요 요직에 가기 위해서 중요하다.
4)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중요하다.
5) 남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에 반드시 입학해야 한다.

6-5. 불공평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기준으로 대학을 가야 합니까?

1) 학교 성적
2) 출신 성분 및 토대
3) 재력 4) 남학생 위주

5) 기타 (적어주세요)

6-6. 여성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1) 가정 살림이나 아이를 키우는 일을 맡아야 한다.
2)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에 고급중학교 졸업도 하지 않는 게 좋다.
3) 생계 활동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
4) 남성이 좋은 직업을 더 가지도록 남학생이 대학에 가는 것이 좋다.
5) 간부 등 여성이 좋은 직업을 가지는 기회가 먼저 보장 돼야 한다.

6-7. 취약 계층이 교육을 충분히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미 지원을 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다.
2) 어려운 계층은 적극적으로 돕고 장학금 등 교육을 시켜야 한다.
3) 어차피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를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4) 교육을 해도 형편이 달라지지 않아 필요 없다.
5) 장애인 등을 위주로 교육 지원을 해야 한다.

6-8. 보통 학생들이 미래(직업)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1) 대부분 군입대를 하여 당원이 되고자 한다.
2) 출신성분이 좋으면 대학에 입학하여 간부가 되고자 한다.
3) 출신성분에 따라 원하지 않은 곳에 배치된다.
4) 출신성분은 알기 어렵고 성적을 함께 고려하여 배치된다.
5) 희망한다면 어떤 곳이든 갈 수 있다.

6-9. 학생들은 주로 언제 자신의 출신 성분을 알게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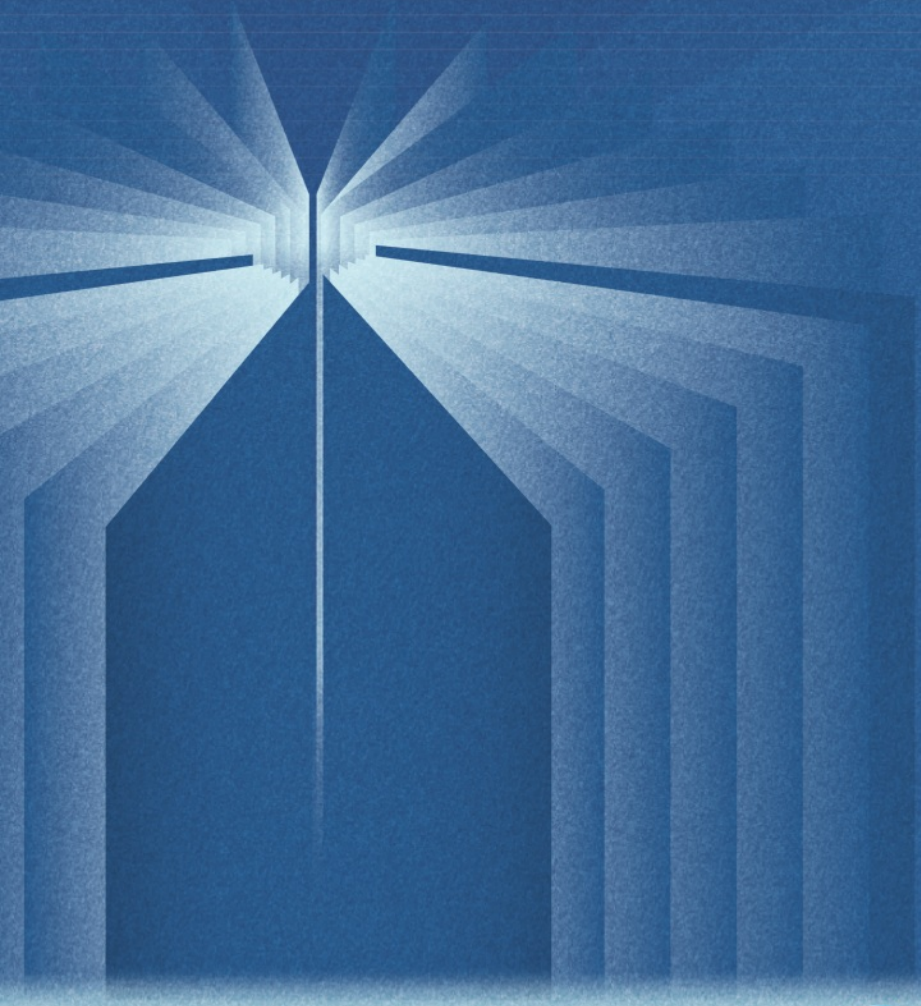
1) 소학교, 고등중학교에 우수한 인재 선발에 제외되면서
2) 군대 입대가 좌절되면서
3) 대학 입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4)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할 때

5) 사회 진출 이후에 간부에 탈락하면서 알게 된다.

6-10. 토대에 의해 직업(직장)이 정해지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매우 옳다.
2) 바람직한 편이다.
3) 일부는 불공평하다.
4) 불공평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
5) 올바르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

감사합니다.



DAILY NK NAUH 북한민주화네트워크 NKnet NDI 통일아카데미 Unification Academy